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미국동포 귀환 이민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조 형 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24년 2월



# 미국동포 귀환 이민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이 논문을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조 형 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지도교수 김 주 경

조형재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홍 경 수	
위 원	황 은 진	
위 원	공 민 석	
위 원	김 경 략	
위 원	김 주 경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Motherland and National Acceptance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Kim Ju-Kyong

The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by Jo Hyung Jae has been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Decemer, 2023

Chair	<u>Hwang, Kyungsoo</u> 
Member	<u>Hwang, Eunjin</u> 
Member	<u>Gong, Min-Seok</u> 
Member	<u>Kim, Kyung Rak</u> 
Member	<u>Kim, Ju Kyong</u>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방법론 및 연구의 구성 .....	5
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2. 연구의 구성 .....	6
<b>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b> .....	<b>8</b>
제1절 재외동포와 미국동포 .....	8
1. 재외동포의 정의 .....	8
2. 미국동포의 정의 .....	9
제2절 이주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0
1. 이주와 이민의 개념 .....	10
2. 이주 연구 .....	12
제3절 귀환 이주에 관한 이론적 접근 .....	22
1. 귀환 이주, 귀환 이민의 정의 .....	22
2. 귀환 이주에 관한 이론 .....	23
3. 귀환 이민에 대한 국민 수용성 .....	30
4. 모국 기여 .....	37
<b>제3장 미국동포의 이주와 귀환</b> .....	<b>39</b>
제1절 재외동포 이주·귀환이주 개요 .....	39
1. 재외동포의 이주 .....	39
2.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 .....	40
제4절 미국동포의 이주와 귀환 .....	42

1. 미국동포의 이주 .....	42
2.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 .....	46
<b>제4장 연구의 설계 .....</b>	<b>49</b>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	49
1. 연구모형 .....	49
2. 가설 설정 .....	51
제2절 변수의 설정 .....	53
1. 종속변수 .....	53
2. 독립변수 .....	54
3. 매개변수 .....	62
제3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	63
1. 조사 대상 및 설문 구성 .....	63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68
<b>제5장 실증 분석 .....</b>	<b>70</b>
제1절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분석 결과 .....	70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70
2.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	71
3. 측정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	81
4. 상관관계 분석 .....	83
5. 다중회귀분석 .....	86
6. 가설 검증 결과 .....	88
제2절 국민 수용성 분석 결과 .....	89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89
2.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	90
3. 측정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	98
4. 상관관계 분석 .....	99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100
6. 가설 검증 결과 .....	105
제3절 소결 및 함의 .....	106
1. 미국동포 귀환 의향 실증 분석 결과 .....	106
2. 국민 수용성 실증 분석 결과 .....	110
3. 미국동포와 국민의 인식 분석 결과 비교 .....	113
4. 미국동포·국민 인식 분석 결과의 시사점 .....	116
<b>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b>	<b>120</b>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20
1. 연구결과의 요약 .....	120
2. 시사점 .....	123
제2절 정책 제언 .....	124
1. 미국동포 대상 정책에 대한 제언 .....	124
2. 국민 대상 정책에 대한 제언 .....	128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31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41
【부록 1】 미국동포 설문지(국문) .....	147
【부록 2】 미국동포 설문지(영문) .....	153
【부록 3】 국민 설문지 .....	161

## 표 목 차

<표 2-1> 주요 이주 이론의 내용과 이주 요인 .....	20
<표 2-2> 귀환 이주 선행연구 내용과 이주 요인 .....	29
<표 2-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수용성 영향 요인 .....	35
<표 3-1> 재외동포현황 .....	39
<표 3-2> 해외이주자 및 귀환이주자 추이 .....	41
<표 3-3> 미국동포 현황 .....	45
<표 3-4> 거주자격별 미국 동포현황 .....	45
<표 3-5>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 받는 미국 동포 .....	47
<표 4-1> 가설 설정 .....	51
<표 4-2> 귀환 의향의 독립변수 구성 요인 .....	57
<표 4-3> 국민 수용성 독립변수 구성 요인 .....	61
<표 4-4> 국민 수용성 매개변수 구성 요인 .....	63
<표 4-5> 측정 항목(미국동포) .....	64
<표 4-6> 측정 항목(국민) .....	66
<표 5-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미국동포) .....	70
<표 5-2> 요인별 데이터 명칭 내역 .....	71
<표 5-3> 귀환 의향 기술통계 결과 .....	72
<표 5-4>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 .....	73
<표 5-5> 사회적 관계망 기술통계 결과 .....	74
<표 5-6>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 기술통계 결과 .....	74
<표 5-7>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부적응) 기술통계 결과 .....	75
<표 5-8>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정체성) 기술통계 결과 .....	76
<표 5-9>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긍정 인식) 기술통계 결과 .....	77
<표 5-10>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부정 인식) 기술통계 결과 .....	77
<표 5-11>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 기술통계 결과 .....	78

<표 5-12> 정책적 요인(복수국적) 기술통계 결과 .....	79
<표 5-13>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기술통계 결과 .....	80
<표 5-14>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기술통계 결과 .....	81
<표 5-15> 미국동포 귀환 의향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82
<표 5-16> 상관관계 분석 결과 .....	85
<표 5-17> 다중회귀 분석 결과 .....	86
<표 5-18>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	88
<표 5-1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국민) .....	90
<표 5-20> 요인별 데이터 명칭 내역 .....	91
<표 5-21> 국민 수용성 기술통계 결과 .....	91
<표 5-22>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 .....	92
<표 5-23> 사회적 관계망 기술통계 결과 .....	93
<표 5-24> 사회·문화적 요인(한국인정체성) 기술통계 결과 .....	94
<표 5-25>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기술통계 결과 .....	95
<표 5-26>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기술통계 결과 .....	96
<표 5-27> 사회·문화적 요인(모국기여) 기술통계 결과 .....	97
<표 5-28>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99
<표 5-29>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00
<표 5-30> 구조모형의 적합도 .....	101
<표 5-31> 국민 수용성의 가설 분석 결과 .....	101
<표 5-32> 매개효과의 유형 .....	103
<표 5-33> 효과의 분해 .....	104
<표 5-34>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	105
<표 5-35> 미국동포-국민의 공통 질문과 가설 채택 결과 .....	113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7
(그림 4-1)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연구모형 .....	49
(그림 4-2) 국민 수용성 연구모형 .....	50
(그림 5-1) 국민 수용성의 구조방정식 .....	102

# 미국동포 귀환 이민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조 형 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요약

본 연구는 지난 150여 년간 해외로 나가는 이주의 흐름이 1990년대 초부터 유출입 흐름으로 바뀌면서 귀환하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도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4대 거주지역 중 모국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에 대해 고찰했다. 아울러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 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했다.

먼저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위해 이주론 및 귀환이주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주의 주요 이론인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역사구조주의론, 사회적 자본론, 누적원인론, 초국가주의, 라벤스타인의 법칙과 귀환이론, 그리고 국내 연구를 통해 이주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영향 요인, 즉,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도출했다.

이어서 미국동포의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한 설문 구성을 위해 미국지역을 중심으로 4대 재외동포 거주지역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CIS 동포의 경우 해방 이후 시작된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귀환 길이 막히면서 잔류한 사람이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았으며, 이들의 귀환은 냉전체제가 해소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일본동포는 해방 직후 대거 귀국했으나 이후에는 한국전쟁 등 복잡한 국내외 사정이 겹쳐 중국, 러시아·CIS 동포와 같은 후속적 귀환의 흐름은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민한 미국동포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민주화에 따른 독재체제의 종결, 교육여건 상승,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애초 이주 원인이 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군사적 요인이 대거 해소됨에 따라 귀환 이민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연구모형과 변수는 미국동포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의 파악을 위한 공통 요인과 미국 동포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비공통 요인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독립변수로는 4개의 독립변수 아래 11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했다. 또 국민 의식 측면에서는 종속변수로 국민 수용성과 4개 독립변수 아래 7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으로 구성했다. 국민 수용성 모형에서는 ‘모국 기여’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매개변수로 설정했다. 가설은 미국동포와 국민 각각 11개씩으로 총 22개를 설정했다. 자료는 미국동포 329명, 국민 7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실증 분석은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했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총 11개 가설 중 3개가 채택되고 8개가 기각됐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2(미국 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미국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sup>3</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미국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sup>4</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으며, 구조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국기여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고, 가설은 11개 중에서 8개 채택됐음을 확인했다. 모국기여 인식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국민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그리고 동포정책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1(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모두 8개다.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통과 의례로서 미국동포의 귀환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과정에 있는 반면에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두 집단 모두에게서 동포정책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의 경우, ‘현지화 정책’을 벗어나 재외동포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보는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확대, 수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허용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와 관련 미국동포의 공공외교활동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야 한다. 모국 정체성 관련, 미국 전역에서 쇠퇴해 가는 한글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를 1만 명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 관련에서는 세계한상대회로 상징되는 글로벌 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앙정부-지자체 재외동포 모국 귀환 정착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방문사업은 물론 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이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계망의 저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출된 성과를 통해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이를 적극 알려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더욱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미국동포의 인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시사점으로는 한국이 미국동포에게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국민은 무언가 통과 의례로서 ‘요건’을 설정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동포가 재외동포를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효능감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미국동포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적극적 관리자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미국동포, 국민, 귀환이주, 귀환이민, 귀환이민 의향, 국민 수용성,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오늘날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는 7백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sup> 19세기 후반의 경제적 궁핍과 20세기 일제 식민 통치,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재외동포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으로 이주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재외동포는 해외로 나가는 존재였다. 이러한 유출의 흐름이 1990년대 초반부터 냉전체제의 해체,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에 따라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으로 귀환하는 유입의 흐름으로 바뀌었다.<sup>2)</sup>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중국동포와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이 경제부국으로 성장한 모국을 방문, 취업 등의 목적으로 대거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1960년대 해외이주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북미와 남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귀환이 늘어났다. 귀환 이주는 이주 인구가 많았던 1970년대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19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차츰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연 5천여 명으로 늘었다. 이후 1997년 IMF사태 이후 크게 줄었다가 2002년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었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환 이주한 재외동포는 매년 10% 정도로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부터는 연 3천~4천여 명씩 귀환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점차 2천~1천 명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귀환자 수치는 귀환 초기의 무관심과 집계 기준의 변동 등으로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포함하면 실제 귀환 이주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1) 재외동포청(2023)은 2022년 기준 재외동포를 7,081,51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서 많은 귀환자가 있었으나 이는 전쟁 종결에 따른 한국인의 귀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귀환으로 간주하지 않음.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재외동포의 이주 흐름이 일방적인 유출에서 유출입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으로 크게 바뀌면서 귀환 재외동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귀환 재외동포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현지화 정책의 기조를 이어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신교포정책’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 천명하며 재외동포정책이 반짝 진척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이주한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소극적 목표에 안주해 오고 있다.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가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네트워크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도록 상생 발전형 정책을 수립해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4대 초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고, 국가 발전이 글로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국과 거주국 간 거주지의 이전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즉 한민족의 원활한 순환 이주가 가능한 이민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과 함께 필요시 모국으로 귀환하여 활동할 수 있는 탄력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국으로 귀환할 의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합적 이주 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이민정책을 3D직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많다. 주로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력을 유입시켜 이를 해소하면서 사회통합, 인권 문제 등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3D직종을 배우기 위해 대거 유입을 허용한 중국동포나 러시아·CIS 고려인에게는 애초 국민으로서, 한민족으로서

마땅한 대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더 차별할 때도 있다. 외국인력의 유입과 관련한 장기 이주 정책의 수립과 함께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주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국가 현안으로 부상한 인구문제이다. 물론 인구문제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의 작은 축으로서 심각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CIS 동포의 국내 유입으로 인구감소 효과는 그만큼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의 부분적 완화를 위해서도 미국동포 등 재외동포가 귀환 의향을 잃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귀환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국적, 병역,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분야별로 시행되는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윤인진, 2020). 국민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통한 수혜를 누릴 여지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국민의 인식은 자칫 미국동포 등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한 인식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간과하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4대 거주지역인 미국, 중국, 러시아·CIS, 일본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귀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귀환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재외동포사회 중에서는 미국 동포사회의 인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 중국, 러시아·CIS 지역의 경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미 일정 부분 파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동포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언어, 의식, 문화 등 모든 게 일본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만큼 이들의 귀환 의향은 중요도가 낮은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CIS의 경우에는 많은 재외동포가 1990년대부터 주로 경제적 동기로 모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귀환 이주 생활을 해왔다(오정은 등, 2015, 2016). 그 결과 이에 관한 연구는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동포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이주하게 된 중국, 러시아·CIS 동포와 달리, 1960년대 해외이주법이 시행된 이후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귀환자 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귀환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의향이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임채완·김홍매, 2011). 결국 현재로서 귀환 이주 동포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동포의 귀환에 관한 생각과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만큼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은 중국, 러시아·CIS 동포의 실질적 귀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도 갖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CIS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동포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이민 의향과 이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한다. 미국 동포의 거주국에서의 경제적 여건, 사회관계망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과 출신국인 한국에서의 수용 여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동양권으로 이주한 중국동포나 일본동포와 달리 미국동포는 서양권으로 이주함에 따라 세대가 지나도 인종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 의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 유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동포의 귀환 이민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국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주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수립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국민의 이해

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일자리, 병역 또는 대학 입학 등 교육 문제와 같이 국민 개개인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동포의 귀환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즉 경제적 여건, 사회관계망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에서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의 수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는 연구로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262만여 명의 동포 중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모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재외동포청, 2023). 미국동포의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미국에 정주할 목적으로 이민한 동포들의 귀환 의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격년마다 발간하는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통해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분하고, 재외국민은 거주국의 영주권을 보유한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인 일반체류자, 유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동포로서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정주하기 위해 이민한 사람이다. 이에 비해 일반체류자와 유학생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귀국할 한국 국민이다. 이들의 귀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이들 중 일부 장단기 체류자나 서류 미비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이민자 그룹이다.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고찰하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반체류자와 유학생 그룹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이민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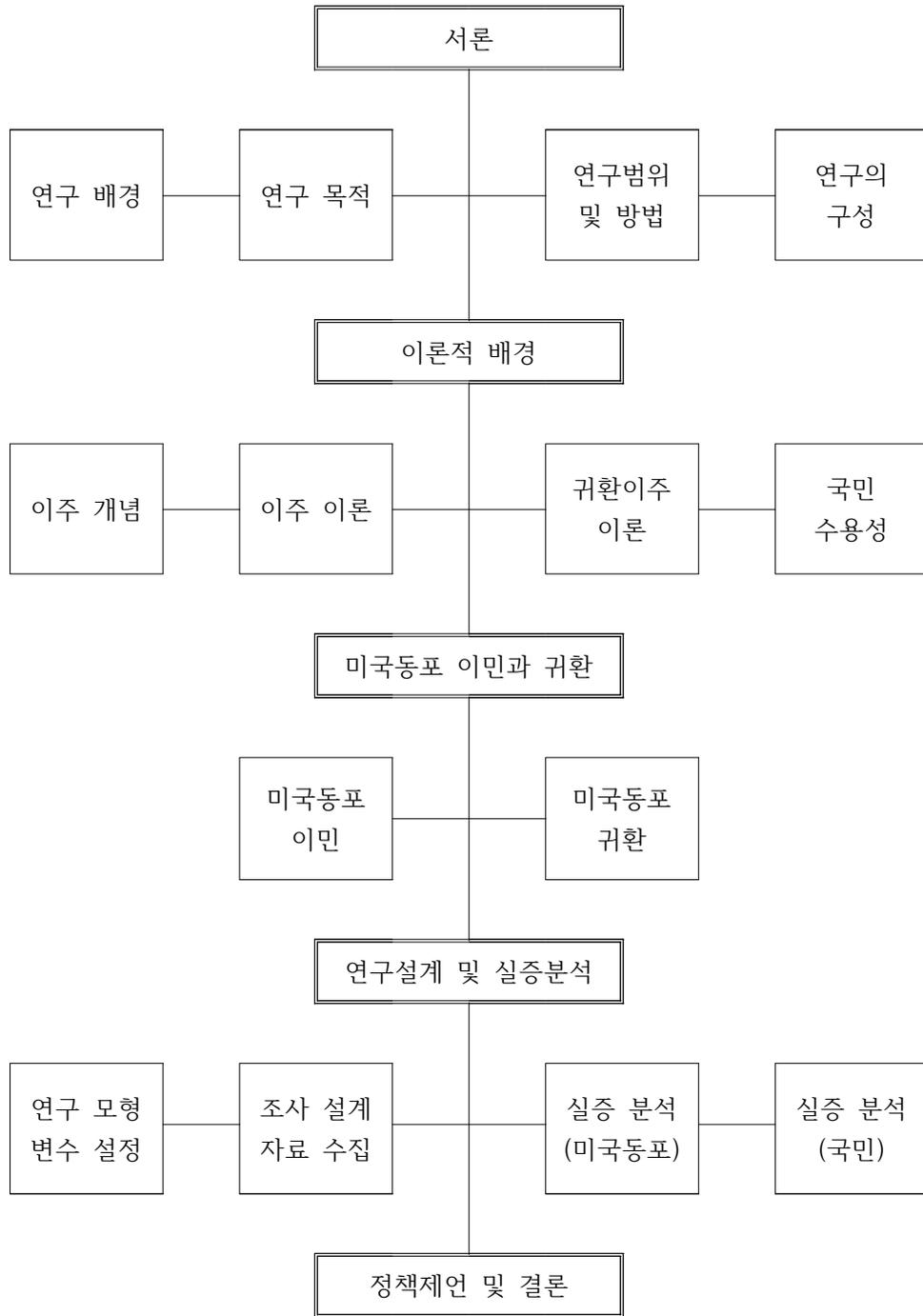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질적 연구로서 문헌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의 귀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동포 및 귀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찰한다. 양적 연구로는 본 연구자가 재외동포 지원 전문기관인 재외동포재단<sup>3)</sup>에 근무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수집한 한글학교, 한인회 및 각종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미국동포 1천 5백여 명과 한국의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연구의 설계, 실증 분석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며, 이에 기초한 연구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재외동포와 미국동포, 이주, 귀환 이주, 국민 수용성 등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신고전경제학이나 신이주경제학 등 이주 및 귀환 이주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수용성에 관한 이론을 이주와 귀환 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연구의 설계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이주 및 귀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이민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한다. 셋째, 실증 분석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의 영향 요인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

3)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발족하면서 6월 4일 자로 해산됐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6월 5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재외동포와 미국동포

#### 1.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란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동포의 의미로 통상 사용되는 말은 ‘동포’ 외에도 ‘교포’, ‘교민’, ‘재외국민’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개념을 함께 사용해 왔다. 먼저 ‘과거 국적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sup>4)</sup>에 따른 정의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제2조 제1호)’ 이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제2조 제2호)’ 이다. 다른 하나는 혈통주의를 채택한 구(舊)「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정의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제2조 제1호)’ 또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제2조 제2호)’<sup>5)</sup> 이다. 두 법의 정의를 비교하면 우선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에 포함하는 두 법의 제2조 제1호는 동일하다. 차이는 제2조 제2호에서 나타난다. 차이는 외국국적동포를 정의하는 제2조 제2호에서 나타난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정의는 국적이 중시되는 개념인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정의는 ‘혈통’이 중시되는 ‘민족’ 중심의 개념이다. 이 중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정의는 2023년 5월 9일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sup>6)</sup>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혈통에 따른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타법 개정. 2023. 6. 14 시행.

5) 구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법률 제10096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이 법은 법률 제19228호(2023.3.4., 타법폐지, 2023.6.5. 시행)에 의해 폐지됨.

6) 법률 제19402호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7)으로 정의된다. 혈통에 따른 정의에 국적 기준의 개념을 더하여 좀 더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범위를 인정하여 규정했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간의 재외동포 정의의 차이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나타난다. 대통령령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8)</sup>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법에서의 외국국적동포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제3조 제1호)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제3조 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이 있느냐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느냐의 차이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이 없는 경우 재외동포가 아니지만,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외국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도 재외동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CIS 지역의 무국적 동포와 남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일본의 조선적 동포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와 재외동포 유관 기관·단체들은 구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혈통’ 중심의 재외동포의 개념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수립, 시행했다. ‘국적’ 중심의 재외동포 개념은 법무부가 주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통주의에 의해 재외동포를 정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의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 2. 미국 동포의 정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에는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가 모두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1호 나목.

8)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타법개정. 2023.3.7. 시행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동포는 이 같은 정의에 부합하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인 미국 시민권자로 규정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의 분류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이주한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으로 구성된다. 일반체류자와 유학생은 귀국할 한국 국민으로서 이들의 귀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조사 대상에서 이들은 제외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동포’를 일반체류자와 유학생을 제외한 미국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한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인으로서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 미국동포는 총 2,615,419명으로 이를 거주자격별로 보면 미국 시민권자가 1,523,823명이며, 영주권자가 440,171명, 일반체류자가 607,333명, 유학생이 44,092명이다.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가진 미국동포는 총 1,963,994명이다.

## 제2절 이주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 이주와 이민의 개념

이주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이다.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3)<sup>9)</sup>. 또한 이민은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혹은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 이주는 이보다 포괄적인 뜻으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의 단기적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해 주거지를 바꾸는 모든 형태의 이동을 말하기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sup>10)</sup>. 국제이주기구(IOM, 2023)는 이주(Migration)를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지를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국내에서 이동하거나 외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Immigration)은 도착국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국적국이나 일상적 거주국에서 새로운 거주국이 될 목적국으로 들어가는 이동으로 정의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 반면, 움베르토 에코(2003)는

9)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자 2023. 6.12.

10)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308>, 검색일자 2023.6.2.

이민은 일부 개인들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주는 국민 전체가 조금씩 한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그는 이민 현상은 정치적으로 통제, 제한 혹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주는 자연현상과 같은 것으로서 일단 발생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이민은 이민자들이 이민하는 나라의 풍습을 대부분 수용하는 반면, 이주는 이주자들이 이주하는 지역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인식했다.

이민에 대한 정의는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주는 국내의 이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에 관한 논의가 국제이주를 지칭하는 경우, 이민과 이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마이클 새머스(이하 Samers, 2013)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논의를 할 때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두 개념을 내포했다. Samers(2013)는 국제이주를 송출국에서 국경을 넘어 목적국에 거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목적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일시적인 거주 여건에 처한 사람들의 이주 특성을 설명할 때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어떤 국가의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은 채’ 오래 거주하는 경우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에코와 Samers의 정의에 따르면 이주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주요 사용되고, 이민은 국가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통제, 제한 등이 작용할 수 있는 성격의 이주에 대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라 외국에서의 단기적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해 주거지를 바꾸는 모든 형태의 이동으로, 이민은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혹은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의 이주 개념은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이민이 고찰의 대상으로서, 귀환 이민의 원인행위인 이주는 국제이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앞서 에코와 Samers의 정의에 따라 이주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민은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 또는 제한 등이 명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주 수용국의 영주권, 시민권 부여 등이 관련된 이주의 경우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이주 연구

이주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회현상이지만 이를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매우 많다(Samers, 2013). 그러나 다양한 이주 현상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이론은 없다. 이론마다 이주 양상에 대해 상당 부분 설명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astles & Miller, 2013; Samers, 2013; Brettell & Hollifield, 2008, Samers, 2003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들을 구분하기 위한 체계적 설명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Massey et al.(1998) 등은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과 연속적 또는 경로의존 성격을 띠는 후속 이주에 대한 이론으로 구분한다(Samers, 2013). Boyle(1998) 등은 이주자가 이주 행위와 패턴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이론과 여러 이론과 개념들을 묶어서 설명하는 통합적 이론으로 나눈다. 이 밖에 이론들을 해석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으로 나누는 설명 방식도 있다(Samers, 2013).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이주의 원인, 과정, 유형에 대한 연구와 이주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뉜다. 이와 함께 이주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요 연구 대상이므로 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Massey et al.(1998) 등의 구분 방식에 따라 이론들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후속 이론을 추가하여 검토하면서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이주에 대한 이론은 이주 결정의 기준을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했다(석현호, 2000). 다양한 이주이론을 통해 포괄적인 이주론을 구성하고자 했던 Massey et al.(1998) 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신고전-거시경제학적 이론은 국제이주가 지역 간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Todaro & Maruszko, 1987, Lewis, 1954; Ranis & Fei, 1961, Harris & Todaro, 1970). 이에 따르면 이주는

임금이 낮거나 노동력이 남는 국가로부터 임금이 높고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다. 그 결과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 노동력의 공급은 줄어들고 임금은 상승하며,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임금이 하락하며 균형에 도달한다(Massey et al., 1998). 이 이론은 국제이주가 임금과 고용기회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고전-미시경제학적 이론은 사람들이 비용-편익의 계산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주장한다(Todaro, 1969, 1989; Borjas, 1989). 국제이주는 일종의 인적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개념화된다(Sjaastad, 1962). 즉,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좋은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교육투자, 이주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해야 하는 여행비용 투자, 새로운 노동시장에 적응해야 하는 노력, 출신국에서의 관계를 끊고 거주국에서 새롭게 유대를 형성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등 인적 투자를 해야 한다(Todaro & Maruszko, 1987; Massey et al., 1998). 비용·편익 계산에 따라 산출되는 순이익은 거주국과 출신국에서의 기대 소득의 차이에서 이주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 2) 신이주경제학

신이주경제학은 개인 행위자에 의해 이주가 결정된다는 신고전경제학적 가정과 결론에 도전하면서 시작됐다. 신이주경제학은 이주가 서로 분리된 개인 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Stark & Levhari, 1982; Stark, 1984; Katz & Stark, 1986; Lauby & Stark, 1988).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대수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제약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동체에 의해 이주가 결정되기도 한다(Massey et al., 1998).

이 같은 주장은 신고전경제학의 맹점을 지적한 통찰로서 가구 차원의 다양한 자원 활용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 가구는 개인과 달리 가족노동을 이주 지역별로 할당하여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신국의 경제적 침체나 생산활동의 실패에 따른 수입원 감소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Massey et al., 1998).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작황 부진, 실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가구 수입에 대한 위험을 개인보험, 실업보험, 은퇴보험, 선물시장 등 신용시장이나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놓고 있다. 그러나 신이주 경제학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이러한 자본시장이나 신용시장이 없거나 취약한 경우 자본축적을 위해 강한 이주 동기가 작용하게 된다고 본다(Massey et al., 1998). 신이주경제학은 이 밖에 이웃 가구보다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이주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3) 노동시장분절론

노동시장분절론은 개인 또는 가구의 합리적 선택을 이주의 요인으로 꼽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과 달리 경제구조적 조건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이주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석현호, 2020). 노동시장분절론의 강력한 주창자인 Piore(1979)는 국제이주가 선진국들의 경제구조에 내재한 영구적 이주수요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Massey et al.(1998)도 이주가 개인이나 가구의 미시적 합리적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 내재해 있는 노동수요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Piore(1979)에 따르면 이주는 저임금, 고실업 등의 송출국의 배출요인(Push Factor)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수용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라는 흡수요인(Pull Factor)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원천적 수요는 선진국 산업과 경제의 4가지 본질적인 특성, 즉 구조적 인플레이션, 노동자 동기부여의 계층적 한계, 이중노동시장의 형성, 소수민족지역 형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먼저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직업적 계층구조와의 부조화에서 유발되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금이 사회적 명망과 지위의 계층구조와 일치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저숙련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고용주는 이들의 임금을 쉽게 올려줄 수가 없다. 다른 계층의 임금도 이와 비례해서 인상해 줘야 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Piore, 1979). 이 경우 고용주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주노동자를 수입하는 방법이다.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이주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 동기부여의 계층적 한계는 노동자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축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직업적 계층에서 맨 밑바닥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장이 이주노동자의 만성적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중노동시장은 자본이 생산의 고정요소인 데 반해 노동은 가변요소라는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함으로써 형성된다(Massey et al., 1998). 영속적인 수요가 있는 자본 집약적 1차 부문 시장과 계절적이고 불규칙한 수요가 있는 노동집약적 2차 부문 시장으로 나뉘는 것이다. 결국 이 시장에는 거주국의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된다.

#### 4) 역사구조주의론(세계체계론, 종속이론)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기능주의적 이론에 대응하면서 1950년대에 등장한 역사적구조주의는 세계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불균등한 분배 구조에 주목했다(Massey et al., 1998). 이에 따르면 역사적구조주의론자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장이 국가별로 정치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현실을 영속화하고 계층화된 경제질서를 더욱 강화한다. 역사적구조주의론자들은 이주가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한 국가의 자원을 착취하게 함으로써 불평등한 발전을 영속화한다고 주장한다(Castles & Kosack, 1973; Sassen, 1988).

이주에 대한 역사구조주의적 관점의 설명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는데 세계체계론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속이론이 대표적이다. Wallerstein(1974, 1979, 1984)이 주창한 세계체계론은 ‘중심부(Core)’ 자본주의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저발전된 ‘주변부(Periphery)’ 자본 국가가 편입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Wallerstein에 따르면,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심부’ 나 ‘반주변부(semi-Periphery)’ 로 이주가 가속화했고, 점차 주변부 전산업사회로 퍼졌다.

세계체계론을 수용하는 학자들은 1960년대 이후 나타나는 신식민주의, 즉 자본주의 이윤추구 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남부의 매관(買辦, comprador)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다국적기업과 매관정부의 역할로 인해 농업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줄고 취업 형태가 왜곡되면서 전(前)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외 이주가 촉발된다고 주장한다(Samers, 2013).

중속이론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3세계의 저발전은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한 결과이며, 식민 지배 이후에는 불공정한 무역으로 선진국 경제체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됐다(Frank, 1969). 중속론자들은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널리 행해진 미국회사들의 기업식 영농이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Samers, 2013). 또한 미국 자본은 농업 노동 외에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두뇌유출(Brain Drain)’을 통해 이주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중속’ 관계를 만들어 냈다(Goss & Lindquist, 1995; Kearney, 1986; Castle & Miller, 2003).

### 5) 사회적자본론

사회적 자본론은 가족, 친지, 공동체 등 이주자의 사회적 연결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면서 이주에 따른 자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자 Glenn Loury(1977)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가족 또는 공동체 내의 보이지 않는 자원(resources)’이라고 규정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로 특히 이주자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assey et al., 1998). MacDonald & MacDonald(1964)는 이주자 네트워크를 기원국과 정착국에서 이주자, 과거 이주자, 비이주자를 잇는 연결로 정의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처음 인식한 것은 Massey et al(1987)였다. 이러한 이주자네트워크로는 친척, 친구와 같은 ‘강한 유대(strong ties)’와 공통의 문화나 민족성과 같은 ‘약한 유대(weak ties)’가 있다(Samers, 2013). 이주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주의 비용과 위험을 줄여 기대수익을 높임으로써 이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Taylor, 1986; Massey & Garcia Espana, 1987; Massey 1990a, 1990b). 이주의 모든 행위가 새로운 이주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Massey et al., 1987, 1994).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기관, 개인사업자, 그리고 인권침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주자들을 도우려는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이 자발적으로 생긴다. 영리 기관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밀수, 은밀한 통행 안내, 노동계약, 비자 등의 서류 위조, 합법적 거주자나 시민권자와의 기획

결혼, 집구하기, 신용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Prothero, 1990, Massey et al., 1998). 시간이 가면, 이들 개인, 회사, 조직은 이주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면서 이주의 흐름은 점점 제도화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제도화 과정이 정부의 통제 밖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는 막기 어려운 흐름이 되고, 영속화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Massey et al., 1998).

## 6) 누적원인론

누적원인론은 스웨덴의 학자 Gunnar Myrdal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하나의 요소가 변하면 다른 요소를 변하게 하고, 이 요소가 다시 원래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누적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다(Myrdal(1957). Massey(1990b)는 이를 이주에 폭넓게 적용하여 이주가 일단 시작되면 후속 이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맥락이 다시 원인이 되어 추가적인 이주를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Massey, 1990b). Massey et al(1998)은 이처럼 누적되는 방식으로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다음 일곱 가지 요인을 들었다. 네트워크의 확장, 상대적 박탈감, 비생산적 농지구매, 자본집약적 영농, 이주문화 형성, 인적자본의 불균형, 이주자 직업의 기피 성향이다.

먼저 네트워크의 확장 요인이다. 출신국의 한 지역의 이주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주는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영속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시간이 가면 이주 행위는 송출국의 다른 지역으로 점점 더 확산한다(Taylor, 1986; Massey & Garcia Espana 1987; Massey 1990a, 1990b; Massey et al. 1994). 둘째, 상대적 박탈감 요인이다. 이주자들은 절대적 수입원을 늘리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이주하기도 하지만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주한다. 이를 통해 이주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높아지면 비이주자 가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이주하려는 의향을 갖게 된다(Massey et al., 1998) 셋째, 비생산적 농지구매 요인이다. 이주자들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망이나 노후 소득을 위해 농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부득이 휴경지가 늘게 되는데 노동수요를 줄여 이주를 촉발한다 (Massey

et al., 1998). 넷째, 이주자가 있는 가구는 전통적 방식 대신 자본 집약적 영농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노동수요를 떨어뜨려 다른 가구의 이주를 촉진한다. 다섯째, 어떤 공동체에서 이주가 유행하면 선진산업경제를 경험한 이주자들의 기호와 동기에 따라 이 지역의 가치와 문화적 인식이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이주를 유발한다(Piore, 1979). 여섯째, 출신국과 수용국 간의 인적 자본의 불균형 요인이다. 이주는 먼저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이주자들로부터 선택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출신국의 인적자원은 고갈시키고 수용국의 자원은 계속 쌓이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주의 원천을 제공한다(Massey et al., 1998). 마지막으로, 이주자직업에 대한 기피 성향 요인이다. 이주자들은 수용국에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원주민들은 대개 이 직업을 꺼리기 때문에 ‘이민자직업’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이는 이주수요를 계속 창출함으로써 이주는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Massey et al., 1998).

## 7)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세계의 글로벌화의 한 측면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출신국과 수용국을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이주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Basch 등(1994)은 초국가주의를 이주자들이 “출신국과 수용국 간에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국민 정체성과 국제정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탈영토화된 국민국가들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Vertovec(1999)은 초국가주의를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연결된 사람과 제도의 다층적 유대와 상호작용”으로 규정하며,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국가주의 공동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주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계된 두 곳 이상의 장소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생활한다. 이에 따라 초국가주의는 과거의 친족관계, 이웃 관계, 직장 등에 기반하여 직접 대면하는 공동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먼 거리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가상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Castle & Miller, 2013).

오늘날의 이주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위협에 따른 구조적 공포나, 어려움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주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별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존재이다(Brettel & Hollifield, 2008. Samers, 2013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실리콘 벨리의 인도 출신 엔지니어나 기업인은 나중에 인도의 방갈로르와 실리콘벨리 간의 이주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Samers, 2013). 초국가주의는 미래의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급성장하며 시간이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 정의가 어렵고, 현재의 경험적 연구 성과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Castle & Miller, 2013).

### 8) 라벤스타인의 법칙

1800년대 후반의 지리학자 Ravenstein(1885, 1889)은 영국의 국내 이주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주로 높은 임금이나 좋은 일자리 때문에 이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이론의 시초격으로 결정론적 관점을 취했던 이 연구를 통해 Ravenstein은 일련의 ‘이주법칙’을 제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Samers, 2013에서 재인용).<sup>11)</sup> 그러나 Samers는 그의 법칙 중 일부<sup>12)</sup>는 현재의 국제이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 이주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다음 4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단거리 이주는 ‘상업·산업중심지로의 이주 흐름’을 형성한다.
2. 모든 ‘이주 흐름’은 ‘역흐름’을 생성한다.
3. 장거리 이주는 대개 ‘대규모의 상업·산업 중심지’로 향한다.
4.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더 많이 이주한다.

Ravenstein은 이주를 촉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서 ‘배출-흡인요인’, 즉 특정 지역의 ‘배출(Pushed)’ 요인과 다른 지역으로의 ‘흡수(Pulled)’ 요인으로 제시했다(Samers, 2013에서 재인용). 배출요인으로는 인구 증가, 빈곤, 정치적

11) 라벤스타인의 법칙은 이주 관련 별도의 항목으로서 소개할 수준의 이론은 아니지만 본 연구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한다는 점,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배출-흡인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이론의 후반부에 소개함.

12) Samers(2013)는 7가지 법칙을 추렸는데 연구자는 이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을 뽑음.

압제, 자원 부족, 전쟁 등의 환경요인을 들 수 있고, 흡인요인으로는 취업, 삶의 질 향상, 의료기술, 정치적 자유 등이 있다. Ravenstein의 ‘배출-흡인요인’ 분석은 이주를 유발하는 다양한 힘을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Samers, 2013). 그러나 ‘배출-흡인요인’ 분석은 설명력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신고전경제학 이론에서도 채택되면서 활용됐다 (Samers, 2013). 지금까지 8개 주요 이주이론의 내용과 흐름을 원인과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 표 2-1> 주요 이주 이론의 내용과 이주 요인

구분	주요 내용	이주 요인	이주 변수	연구자
신고전 경제학	-지역간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차이에서 이주 -비용·편익에 의거 큰 순익 발생지로 이주 -개인, 가구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주	-경제적 요인	-임금, 고용 -언어·문화능력, 이주지 조사·적응노력 등 인적자본	-Massey et al., (1998), Todaro & Maruszko(1987), Lewis(1954), Ranis & Fei (1961), Harris & Todaro (1970)
신이주 경제학	-이주는 수익 최대화, 위험 최소화 -개인 아닌 가족, 가구에 의해 이주 결정	-경제적 요인 -사회적관계망 요인	-출신국 경제침체, 생산활동 실패, 실업, 작황부진, 상대적 박탈감	-Massey et al., (1998), Stark & Levhari(1982), Stark(1984), Katz & Stark (1986, 1987), Lauby & Stark(1988)
노동시장 분절론	-경제구조적 조건이 이주 결정 -선진국 경제에 이주 수요 영구적 내재 -자본집약, 노동집약시장의 이중시장이 이주 촉진	-경제적 요인 -사회적·문화적 요인	-구조적 인플레이션, 임금·계층 부조화, 이중노동시장, 소수민족구역 형성	-Piore(1979), Massey et al., (1998)
역사구조 주의론	-글로벌 자본주의가 국가별 정치력 불균등, 계층화한	-경제적 요인	-취약한 출신국 정치력, 경제력	-Massey et al., (1998), Castles &

(세계체 제론, 종속이론)	경제질서 창출 -중심부(부국)의 주변부 (빈국)자원 착취 과정에 서 이주 발생	-사회적· 문화적 요인	-불안정한 사회 경제구조 -저임 노동력	Kosack(1973), Cohen(1987), Sassen(1988), Wallerstein(1979, 1984)
사회적 자본론	-가족, 친지, 공동체 연결 망이 사회적 자본화하여 이주 촉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되면 비용·위험 줄여 이주촉진	-사회적 연 결망 요인	-가족, 친지, 친 구, 조직 등 네 트워크 -민족, 국가, 종 교 등 공통의 문화·역사· 전통	-Massey et al., (1987), Samers(2013), Taylor(1986) Massey & Garcia España(1987), Massey(1990a, 1990b,1998), Prothero(1990), Christiansen(1996)
누적원인 론	-이주가 변화시킨 사회적 맥락이 다시 원인이 되어 추가 이주를 촉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사회·문 화적 요인	-네트워크 확장 -상대적 박탈감 -자본집약 영농 -이주문화 형성 -인적자본 불균형 -이주자 직업 낙인효과	-Massey(1990a, 1990b,1998), Massey et al. (1994), Massey & Garcia España (1987), Myrdal(1957), Taylor(1986), Piore(1979)
초국가주의 의	-세계 교통·통신 발달로 출신국·수용국 간의 쉬 워진 연계로 이주 증가 -이주자는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연계된 2곳 이상의 장소 반복 이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사회·문 화적 요인	-가족, 친지, 친 구, 조직 등 네 트워크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공유 속성	-Basch, Glick-Schiller & Blanc(1994), Vertovec(1999), Castles & Miller( 2013), Brettel & Hollifield(2008)
라벤 스타인의 법칙	-이주는 대개 상업·산업 중심지로 향함 -모든 이주는 역이주 흐름 생성	-경제적 요인	-고임, 일자리, 인구증가, 빈곤, 정치적 압제, 자 원부족, 전쟁	-Ravensrein(1885), Samers(2013)

	-이주의 ‘배출-흡인 요인’ 제시		-취업, 삶의 질, 의료기술
--	-----------------------	--	--------------------

자료 : 이주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 제3절 귀환 이주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 귀환 이주, 귀환 이민의 정의

이주는 과거에는 일회성 흐름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귀환 이주나 제3국으로의 재이주를 포함한 후속 이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정용문, 2020). 후속 이주의 대표적인 유형이 귀환 이주이다. 앞서 이주와 이민의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웠듯이 귀환이주 역시 귀환이민의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먼저 귀환 이주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Gmelch(1980)는 귀환 이주를 이주자들이 재정착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귀환 이주의 경우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는 “평소 거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이동한 사람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국제 이동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난 사람들이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가 영주 귀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귀환 이주가 귀환 이민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주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민은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 또는 제한 등이 명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사용하기로 한 맥락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귀환 이주를 이주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와 귀환 이주에 대한 Gmelch의 정의를 채택하여 단기적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귀환 이민은 외교부의 정의에 따라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가 영주 귀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외교부의 정의에 따를 경우 미국 이민 의향은 있으면서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하지 못한 채 장기 체류하다 귀환하는 이주자의 경우, 귀환 이민으로 분류되지 않아 귀환 이주자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맹점이 있다(정용문, 2020).

## 2. 귀환 이주에 대한 이론

귀환 이주는 오랫동안 학자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885년 Ravenstein은 유명한 이주 법칙에서 “이주의 주요 흐름은 상응하는 보상적 귀환 흐름을 낳는다” 는 귀환 이주의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주 연구는 주로 일방적인 흐름 측면에서 연구됐다(Gmelch, 1980). 많은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외국인 정보는 잘 관리하지만 귀환하는 시민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Gmelch, 1980).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귀환 이주는 인류학의 연구 주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출신국과 거주국의 양면에서 연구가 시작됐다(Gmelch, 1980; Casarino, 2004). 하지만 귀환 이주는 선행하는 이주에 비해 이론화가 덜 되어 있어 여전히 이주이론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귀환 이주의 초기 이론적 검토를 시작한 연구자는 Gmelch(1980)이다. 그는 귀환 이주의 유형, 사유, 적응 및 재조정, 출신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귀환 이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했다. Gmelch(1980)는 귀환 이주의 결과를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로 구분되는 최초 이주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최초 유형이 일시적 이주인 경우는 특정 목적 달성에 따라 성패의 평가가 갈린다. 영구적 이주는 귀환 사유가 부모의 병환이나 거주국의 불안정한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는 실패로 평가하지 않는다. 반면 낮은 언어, 민족, 풍속이나 친구의 부재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귀환한 경우는 거주국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귀환한 실패의 사례로 분석한다. Gmelch(1980)는 귀환 이주 동기로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모국애, 거주국 차별 요인을 들었다. 이들 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거주국 차별 요인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은 비경제적 요인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 등 모국애가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yes, B. I.(1997)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귀환 이주에 대한 논의를 이론화했다. Reyes는 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인과 귀환하는 멕시코인 간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서 귀환 이주의 유형을 실망이론, 목표소득이론, 순환이주이론, 사회적 관계망이론으로 구분한다. 먼저 실망이론(disappointment theory)은 이주자가 목적국에서 정착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귀환한다고 주장한다. 실패 이유는 이주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주에 따른 혜택을 잘못 계산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개 목적국과의 거리가 멀거나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정교한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워 이 같은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목표소득이론은 이주자가 목적국에서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여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귀환하는 경우로 이 경우 귀환 이주는 성공의 결과로 평가된다. 둘째로 목표소득이론(target income theory)은 이주자들이 목적국에서 모국에 투자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번 뒤 출신국으로 돌아오는 유형이다(Galer & Stock, 1990, Hill, 1987; Lindstrom, 1996; Massey et al., 1993). 이 이론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의 이민보다는 모국에 남는 것을 선호하지만, 국내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제이민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Berg, 1961). 이민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목표 소득을 더 빨리 축적할 수 있고 더 빨리 출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환은 실망이론 관점과 달리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순환이주이론(circular migration theory)은 다양한 형태의 단기적, 반복적 또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이동이다. 이 유형은 영구적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지를 바꾸겠다는 의사가 분명치 않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Zelinsky, 1971). Reyes는 순환 이주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의 하나로 출신국과 목적국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순환 이주 유형은 경제적 기회를 따라 단기적, 반복적 이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앞의 3가지 이론이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이주의 사회적 네트워킹 관점에 역점을 둔다. Massey(1990a)가 주장한 것처럼, 이주는 매우 역동적이어서 일단 중요한 시작 단계에 도달하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주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면 이주 비용이 감소함은 물론 영구적 이주를 늘리게 되는데 이 경우 귀환은 연기되거나 위축된다(Greenwood, 1969; Taylor, 1986; Mines & Massey, 1985).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귀환을 고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귀환을 지연, 중단하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귀환 이주는 거주국에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기 전인 이주 과정의 초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Reyes, 1997).

귀환 이주 이론을 한 단계 진척시켜 유형화한 학자는 Cassarino(2004)였다. 그는 귀환 이주의 유형을 신고전주의경제학, 신이주경제학, 구조적 접근, 초국가주의, 사회적 연결망이론의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신고전주의경제학 접근법은 귀환 이주의 원인을 이주의 비용을 잘못 계산하여 기대수익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목적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본다. Reyes의 실패이론과 비슷한 관점이다. 신고전경제학 관점에서 이주자는 단지 수익뿐만 아니라 영구 정착, 가족 재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최대화해야 하는데 귀환은 세 가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Cassarino, 2004). 둘째로 신이주경제학은 이와 달리 귀환 이주가 실패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한 “계산된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Reyes의 목표소득이론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신이주경제학은 개인보다는 가족, 가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주자는 목적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송금, 저축 그리고 터득한 기술을 모두 성공의 결과로 보며, 영구이주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환은 자연스러운 성공의 결과이다. 셋째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식은 귀환을 이주자 개인뿐 아니라 상황적,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맥락적 문제로 인식한다. Cassarino는 출신국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즉 “현실”)과 귀환자의 기대 사이의 관계를 Francesco Cerase의 다음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패의 귀환”, “보수주의 귀환”, “은퇴 귀환”, “혁신 귀환”이다(Cerese, 1974). 실패의 귀환은 목적국에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이주자는 강한 귀환 동기를 갖게 된다. 보수주의 귀환과 은퇴 이주는 이주자가 충분한 돈을 번 경우 출신국에서 지주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거나, 노후를 보낼 땅이나 집을 사려는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귀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보수주의 귀환자는 출신국의 사회적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지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환은 출신국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혁신 귀환”은 이주자가 새 거주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귀환하는 유형이다. 귀환 이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이주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귀환자가 출신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 경제적 자원을 중시한다. 귀환의 성패 여부는 출신국 경제의 “현실”과 귀환자의 기대 간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평가된다(Cassarino,

2004). Gmelch(1980)는 구조적 접근 방식과 관련, 상황적, 구조적 요인이 귀환 결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사후에 측정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귀환은 잘 준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귀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신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로 초국가주의는 앞서 이주이론 부분에서 소개한 개념과 대체로 같다. 이주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계된 두 곳 이상의 장소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생활한다. 귀환은 사회적, 경제적 관계 및 교환이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주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국가주의 관점에서의 귀환이 구조적 접근 방식과 다른 점은 귀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하여 재통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Cassarino, 2004). 이들에게 모국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이 요소들이 사회적,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어 귀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활동이 공통 민족, 공통 출신국, 친족관계를 통해 활성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귀환자가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본다. 앞서 이주이론에서 살펴본 이주자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초국가주의에서와 달리 공통의 민족, 출신국이나 친지 등의 네트워크에만 의존해 구축되지는 않는다. Cassarino(2004)는 귀환자가 돌아온 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신국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데, 그 자원은 가족이나 가구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재정적 자원이다.

한국에서도 귀환 이주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중국, 러시아 등의 역사적 이주로부터 1960년대의 미국 이주에 이르기까지 이주는 앞의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유출의 사건일 뿐, 유입되는 사건으로서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정치의 민주화 등에 힘입어 유입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귀환 이주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 1990년대에는 중국, 구소련권의 재외동포가 대거 한국으로 유입된 것도 귀환 이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sup>13)</sup> 한편에서는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13) 국내 귀환 이주는 해방 후 일본 동포의 귀환이 처음이지만 당시 일본동포의 귀환은 일본동포의 본국 귀환이라기보다는 전후 한국 국민이 귀국하는 의미가 강하다.

발생한 이주에 따른 귀환이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주에서도 유입의 흐름이 생기면서 귀환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199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동포와 러시아·CIS 동포의 귀환은 초창기에는 귀환의 의미보다는 주로 취업, 즉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이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고 실질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재외동포의 귀환으로서의 의미가 뒤늦게 관심을 끌게 된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두 지역 동포에 관한 연구는 대개 출입국, 거주, 취업 등 주로 체류 조건이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귀환에 관한 내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김영철(2016)이었다. 김영철(2016)은 아르헨티나 재외동포 1.5세를 대상으로 중남미 재외동포가 역이민을 선택하는 원인과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을 통해 고찰했다.<sup>14)</sup> 그 결과 거주국과 출신국의 경제적 여건, 교육환경, 사회적 조건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주국인 아르헨티나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학업 후 취업 기회의 부족과 한국의 교육환경,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점, 부모 세대와의 관계,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 등이 역이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거주국의 경제 호전, 사회적 변화, 이주 세대의 변화는 역이민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역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직장생활, 조직문화 등 높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경쟁체제, 높은 교육열, 교육문화의 차이, 정체성, 언어 장벽 문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자의 귀환 의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경제적 안정, 치안 측면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 역이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철, 2016).

정용문(2020)은 귀환 이민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호주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에 관한 의향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귀환 의향이 ‘귀하는

14) 김영철(2016)은 미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재이민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역이민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역이민을 귀환 이민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출신국으로 귀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하나의 질문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임에 착안하여 다수의 질문을 통해 충실도를 높여 종속변수를 설정했다.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가구소득, 교육 수준), 목적국에서의 적응 요인(시민권 보유, 영어 구사력, 사회보장제도, 차별 경험), 생애주기적 요인(성별, 연령, 이민시 연령, 거주 기간, 부모 생존 여부)로 설정했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 등 구조적인 불이익을 체험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영어 구사력이 낮을수록 높은 귀환 의향을 보였다. 사회보장제도는 노후에 한국이 자신을 더 잘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을수록 귀환 의향은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노후생활 보장 능력을 호주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회보장제도의 상대적 열세는 귀환 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하위변수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귀환 의향을 보인 점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활용할 기회가 어디에 더 많은지가 귀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동포정책을 거주국에서의 통합적 지위 구축과 모국 귀환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원 정책(2-track policy)으로 추진하여 균형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정용문, 2020).

지금까지 귀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환 이주의 초기 이론적 검토를 시작한 Gmelch(1980)는 귀환 동기로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모국애, 거주국 차별 요인을 들었다. Reyes(1997)는 거주국에서의 일자리 부족, 저임 등 경제적 요인과 교육 수준을 들었고, Cassarino(2004)는 거주국에서의 기대수익, 달성 수익, 거주국 차별, 모국 정체성, 민족, 국가, 문화, 출신국과 수용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을 귀환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영철(2016)은 한국의 교육, 언어·문화환경, 조직문화, 사회적 경쟁,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 안정된 치안, 부모 세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용문(2020)은 호주동포의 귀환 의향 연구에서 가구소득, 교육수준, 시민권, 영어 구사력, 사회보장제도,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이민 시 연령, 거주기간, 부모 생존 여부 등이 귀환의 동기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이 주장한 귀환 동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네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는 일자리, 저임, 기대수익, 달성 수익, 가구소득 요인이 포함되고,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는 부모 생존 여부 및 부모 세대 관계, 출신국과 수용국의 사회적 연결망이 해당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교육, 언어·문화환경, 조직문화, 사회적 경쟁,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 치안, 차별 경험이,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는 사회보장제도가 포함된다. 선행연구에 따라 귀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귀환 이주 선행연구 내용과 이주 요인

연구자	주요 내용	귀환이주 요인	세부 귀환이주 요인
Gmelch (1980)	-귀환 이주 유형, 동기 분석 등 이론 일반화 시도 -최초 이주 유형따라 귀환의 성패 평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거주국 차별 요인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문화적 요인
Reyes (1997)	-귀환 이주 유형 4개로 분류 (실망이론, 목표소득이론, 순환이주이론, 사회적 관계망이론)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거주국 고용, 고임 등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교육수준 등 사회·문화적 요인
Cassarino (2004)	-귀환 이주 5개 유형 제시 (신고전주의경제학, 신이주경제학, 구조적 접근, 초국가주의, 사회적 연결망이론)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기대수익, 달성 수익 등 경제적 요인 -거주국 차별 -모국 정체성, 민족, 국가, 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 -출신국·수용국의 사회적 관계망
김영철 (2016)	-중남미 재외동포 1.5세 귀환 시 경제적 여건, 교육, 사회적 조건의 영향 확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출신국·거주국 경제 여건, 취업기회 -한국의 교육, 언어·문화환경, 조직문화 및 사회적 경쟁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 -안정된 치안 -부모세대 관계

정용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재외동포 귀환 의향 연구</li> <li>- 학력 높고, 영어 못하고, 차별 체험 많을수록 귀환 의향이 높음을 확인</li> <li>- 사회보장제도 신뢰 높을수록 높은 귀환 의향 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요인</li> <li>-목적국 적응 요인</li> <li>-생애주기별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소득, 교육수준</li> <li>-시민권, 영어 구사력, 사회보장제도, 차별 경험</li> <li>-성별, 연령, 이민 시 연령, 거주기간, 부모 생존 여부 등</li> </ul>
---------------	---	--	--

자료 : 귀환 이주 이론을 기초로 연구자 작성

### 3. 귀환 이민에 대한 국민 수용성

재외동포의 이주가 일방적 유출에서 유입이 병행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인진, 2020). 이에 따른 일자리, 범죄, 의료, 건강보험, 교육은 물론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부담할 납세자인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수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sup>15)</sup> 민기(2009)는 수용성을 어떤 대상의 내적 혹은 외적 가치를 심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재은·김영평·정윤수(2007)는 사회의 구성원이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용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사회적 수용성으로 정의했다. 허윤철 등(2017)은 다문화 수용성을 선주민이 이주민을 자신의 공동체로 수용하는 데 얼마나 포용적 또는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재철(2017)은 이를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을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귀환 이주의 국민 수용성은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외동포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포용적·관용적 또는 배타적 태도나 인식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국민 수용성은 주로 재외 동포에 대한 국민

15)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cceptance>, 검색일자 2023.5.25.

인식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재외동포 관련 학계에서 보완적으로 심층 연구가 이어지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귀환 이주, 특히 미국 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인식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귀환 이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친밀도가 66.3%로 높았고,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으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56.9%)’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민족 의식 정도는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유럽, CIS, 남미지역 동포 순으로 나타났다. 귀환 이주 시 이 지역 동포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살기 원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85.1%로 매우 높았다. 2009년도 조사(800명 대상)에서 재외동포 관련해 눈에 띄는 조사 항목은 재외동포 관심도, 재외동포 호감도, 재외동포 기여도이다. 재외동포에게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0% 정도가 ‘관심이 가는 편’이라고 응답해 2007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역별 재외동포 호감도는 미국이 가장 높았고(61.4%), 이어서 호주·뉴질랜드(55.4%)였으며, 구소련지역이 가장 낮았다(16.8%).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도는 ‘독립운동 당시(60.1%)’가 가장 높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48.1%)’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도는 귀환 이주 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의 귀환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가 69.4%로 2007년도의 8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성에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2011년도 조사에서는 국민의 재외동포 관심도가 계속 감소했으나, 재외동포의 국가 발전 기여도(응답율 40.0%)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및 러시아·CIS 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이들 지역 동포의 국내 체류 증가 및 접촉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국내 이주를 희망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재외동포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차츰 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을 늘려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국민 가치관, 다문화 수용성, 재외동포 인식, 재외동포 기여도, 정책적 고려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재외동포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적’을 들었으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국적을 포기한 외국 국적자도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재외동포의 국내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졌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2, 3세, 입양인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이들에 대해 비수용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의 ‘내국인 인식조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현황을 보고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윤인진 등(2015)은 재외동포재단의 2009년, 2011년, 2013년도 인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2013년도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들은 종속 변수로 ‘재외동포 친밀감’과 ‘한국 체류 수용도’를, 독립변수로 ‘한민족 의식’, ‘다문화 수용성’, ‘재외동포 접촉 경험’, 그리고 통제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설정했다. 종속변수인 ‘재외동포 친밀감’은 재외동포가 한국민이라는 동질감, 한민족 소속감,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신념과 감정의 공유의 세 항목으로 측정했고, ‘한국 체류 수용도’는 ‘반대’, ‘국가에 따라 다름’, ‘개의치 않음’의 서열변수로 측정했다. 조사 결과, 재외 동포 인식에는 한민족 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했다. 재외동포 친밀도는 한민족 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한민족 의식의 효과가 다문화 수용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수용도에서도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다문화 수용성 요인이 한민족 의식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려는 다문화적 사고가 재외동포 수용성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윤인진 등, 2015).

2015년도 국민인식조사는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이해교육’ 및

일부 대학에 개설된 재외동포 이해교과목을 수강한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과거 조사와 대동소이했으나 재외동포 호감도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동포의 경우에는 높고, 중남미, 아시아·중동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재외동포 거주국의 국민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호감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재외동포 친근감이 과거 조사 결과에 비해 낮아졌으며, 특히 연령층 20, 30대의 친근감이 더욱 낮게 표출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동질감, 한민족에의 소속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9년 조사에서는 재외동포의 한국 장기체류 및 정착에 대해 사안별로 다르다는 의견이 55.6%, 찬성 37.2%, 반대 7.2%로 나타나 2007년도 조사 시 ‘재외동포가 한국에 살기 원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85.1%에 비해 수용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 재외동포가 한민족이라는 소속감, 친근감, 재외동포와 정치적·경제적 신념과 감정 공유의 세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각각 32.3%, 33.0%, 34.2%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25.3%, 재외동포의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귀환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는 윤인진 등(2020)의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문헌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귀환 재외동포와 지원정책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 분석했다. 주요 쟁점은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병역기피자 입국 허용 연령,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국민과 재외동포의 이해가 얽힌 주제들이다. 연구 결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과거 조사와 같이 대체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눈여겨 볼만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첫째 국민들은 재외동포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 둘째 같은 한민족이라고 다른 외국인보다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동포애가 아닌 현실적 기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인진, 2020:28-29).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65세 이상인 경우 허용되는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의 3배에

달할 만큼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도 7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따른 수혜 조건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비용 부담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에는 반대가 찬성의 5배에 달할 만큼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가수 유승준과 같은 편법 병역기피자의 국내 입국 및 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떠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국민적 부담과 일부 계층의 특혜에 의한 대학입학 및 병역 회피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짙게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과 재외동포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영역으로 귀환 미국동포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백지원(2011)은 서울지역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를 조사한 결과 국적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정의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으로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로 설정하여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정의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흥미, 관심, 자신감, 책임감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미국동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고, 중국동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재외동포 관련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외동포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 이들을 바라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태도와 대중매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개인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명했다.

지금까지 귀환 이민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수용성은 재외동포재단과 소수의 연구자가 수행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관련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파악했다. 2007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분석됐다. 분석된 항목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친밀도, 호감도, 재외동포의 국가 기여도, 귀화 수용도, 한국 국민의식, 한민족 의식, 국민 가치관, 민족정체성, 국적, 혈통, 한국어 가능 여부, 한국 소속감, 재외동포 국내 거주 시

정책적 지원, 정책적 우선 지원지역, 거주국 국민소득, 재외동포 소득수준 등이다. 윤인진(2015)은 재외동포 친밀도와 한국 체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한민족 의식, 다문화 수용성, 재외동포 접촉 경험을 들고 있다. 윤인진(2020)은 또 다른 연구에서 복수국적,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책적 요인이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했다. 백지원(2011)은 국민의 재외동포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를 영향 요인으로 들었다.

이상 연구자와 재외동포재단이 제시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네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는 거주국 국민소득, 재외동포 소득수준,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는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호감도, 국가 기여도, 한국 국민 의식, 한민족 의식, 국민 가치관, 민족정체성, 국적, 혈통, 한국어 가능 여부, 한국 소속감,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는 국내 거주 시 정책적 지원, 정책적 우선 지원 지역 등이 포함된다. 선행 연구에 따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수용성 영향 요인

연구자	주요 내용	영향 요인	세부 영향 요인
윤인진 등 (2015)	-한민족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국민수용성(재외동포 친밀도, 한국체류 수용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재외동포 접촉 경험
윤인진 등 (2020)	-재외동포 인식 우호적이나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음 -복수국적 재외동포 증가 반대가 찬성의 3배 -국민건강보험 혜택 부여 거부감 상당 -병역 및 교육 특혜에 강한 거부감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복수국적 부여 -재외동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병역기피자 입국허용, -재외동포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외국민특별전형

백지원 (2011)	-재외동포 관련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미국동포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 긍정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재외동포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
재외동포재단 (2007)	-재외동포가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동포 순 -재외동포 한국 거주 희망 시 높은 수용 의견(85.1%)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재외동포 친밀도, 한민족 의식, 한국 국민의식 -민족정체성 유지 정책적 지원 -재외동포 국내 거주 정책적 지원
재외동포재단 (2009)	-재외동포 호감도 미국, 호주·뉴질랜드 순 -재외동포 모국 기여도 ‘독립운동 당시’, ‘국내기업 해외 진출 시’ 순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호감도, 기여도 -정책 우선 지원분야 및 지역 -귀화 시 수용도
재외동포재단 (2011)	-재외동포 관심도 지속 감소 -한국어 가능 여부 재외동포 인식에 중요 요소 부각 -중국, 러시아·CIS동포 국내 이주 허용 의견 약화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호감도 -재외동포 기여도 -정책 우선 지원 지역 -귀화 시 수용도
재외동포재단 (2013)	-재외동포 인식 시 ‘국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 -한국 국적 포기한 재외동포도 한국인 범주 포함 인식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민족적요인, 시민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국민가치관, 재외동포 기여도, 한국 출생, 국적, 한국 장기거주, 한국어, 한국법 준수, 한국 소속감 -귀화 시 수용도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 호감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순 -거주국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이 호감도에 영향	-사회적 관계망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호감도, 친밀도 -거주국 국민소득 -한국인 동질감, 소속감, 한민족 의식 -한국 장기체류 수용도 -재외동포 기여도

재외동포 재단 (2017)	-재외동포 친근감, 한국민 동질감, 소속감 과거 비해 감소 -재외동포의 국내 장기체류 및 정착에 대한 수용적 태도 약화	-사회적 관계망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정책 우선 지원 지역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호감도, 친밀도 -거주국 국민소득 -한국인 동질감, 소속감, 한민족 의식 -한국 장기체류 수용도 -재외동포 기여도 -정책 우선 지원 지역
재외동포 재단 (2019)	-재외동포의 국내 장기체류 및 정착에 대한 수용성 지속 감소 -소득수준이 높은 재외동포 거주 국가로 지목된 미국· 캐나다가 호감도도 가장 높 게 나타남	-사회적 관계망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재외동포 관심도, 접촉도, 호감도, 친밀도 -재외동포 기여도 -재외동포 인식 범위 -재외동포 소득 수준 -한국 장기체류 수용도 -한국인 동질감, 소속감, 한민족 의식 -한국민으로의 수용성 -정책 우선 지원 지역

#### 4. 모국 기여

이주는 그 자체로 끝나는 단발성의 행위가 아니라 과정이 일단락된 뒤에도 거주국과 출신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주자들은 출신국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신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주자는 출신국과 거주국을 네트워킹하면서 송금 등을 통해 출신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Ratha, D., Mohapatra, S. & Scheja, E., 2011). ‘기여’의 사전적 의미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 하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3). 출신국에 대한 영향 혹은 기여는 이주자들의 의무가 아니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모국 기여’는 이주자들이 송금,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자의 모국에 대한 기여는 필연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요인, 정체성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출신국에 대한 기여가 이주자들의 의무로 여겨지는 환경이라면 그것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주자들이 송금을 통해서 출신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주자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출신국에 거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기 때문이다(Ratha, D., Mohapatra, S. & Scheja, E., 2011). 게다가 이주자 스스로 거주국에서 인종적, 문화적으로 차이를 크게 느끼거나 출신국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러한 모국 기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대인과 같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 기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모국 기여는 이주자들의 여러 조건(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국 기여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 특히 신뢰의 상승을 통해서 가능하다. 출신국으로의 송금을 통한 모국 기여는 단순히 모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자들과 출신국 국민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Tilly, C, 2007). 신뢰 관계의 형성은 국민이 이주자를 수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점에서 모국 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들을 매개하고 이러한 매개를 통해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국 기여 인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기로 한다.

### 제3장 미국동포의 이주과 귀환

#### 제1절 재외동포 이주·귀환이주 개요

##### 1. 재외동포의 이주

오늘날 재외동포는 세계 180여 개국에 70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적으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할 만큼 많고, 분포 영역 또한 5대양 6대주 180여 개국으로 광대하다. 이들은 크게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전체의 65%인 461만3천541명이고, 재외국민은 35%로 246만7천969명(영주권자 102만3천11명, 일반체류자 129만3천842명, 유학생 15만1천116명)이다. 이들은 그 이주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재외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그중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4대 강국인 미국(2,615,419명), 일본(802,118명), 중국(2,109,727명), 러시아·CIS(456,234명) 지역에 전체의 84.5%인 598만3천498명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표 3-1><sup>16)</sup>.

<표 3-1> 재외동포현황<sup>17)</sup>

지역별		연도별				백분율(%)	2019년 대비 증감율(%)
		2017	2019	2021	2023		
총계		7,439,579	7,493,587	7,325,143	7,081,510	100	-3.33
동북 아시아	일본	818,626	824,977	818,865	802,118	11.18	-2.05
	중국	2,548,030	2,461,386	2,350,422	2,109,727	32.09	-10.24
	소계	3,366,656	3,286,363	3,169,287	2,911,845	43.27	-8.12
남아시아태평양		557,791	592,441	489,420	520,490	6.68	-6.35

- 16) 러시아·CIS 지역 동포 수는 유럽지역 통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술한 456,234명의 동포 수는 연구자가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기초로 국가별로 산출하여 합산한 수치임.
- 17) 이 통계는 재외동포청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한 재외동포 현황(2022.12월 기준)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 처리기록, 직접 조사 등에 의거하여 산출한 추산·추정치임.

북미	미국	2,492,252	2,546,982	2,633,777	2,615,419	35.96	-0.70
	캐나다	240,942	241,750	237,364	247,362	3.24	4.21
	소계	2,733,194	2,788,732	2,871,141	2,862,781	39.20	-0.29
중남미		106,794	103,617	90,289	102,751	1.23	13.30
유럽		639,584	687,059	677,156	654,249	9.24	-3.38
아프리카		10,853	10,877	9,471	10,455	0.13	10.37
중동		24,707	24,498	18,379	18,939	0.25	3.05

자료 : 재외동포청(2023)

재외동포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지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선 말 횡행한 세도정치에 따른 통치체제의 와해, 사회경제적 토대 붕괴, 그리고 그 결말로서 국권 상실과 일제 식민통치로 이어진 국가체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주의 원인으로서는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을사조약(1905), 한일병합(1910)으로 이어진 국권 상실과 이로 인한 생활고, 구직난, 독립운동, 강제징용 및 징병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해방 후에는 남북분단,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제결혼자, 전쟁고아의 발생을 들 수 있고, 이어서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경제적 빈곤, 정치적 불안, 자녀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이주했다. 이들은 전쟁과 식민 통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분화했다.

## 2.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

해방을 맞으면서 이주한 동포 중에 많은 수가 귀환했으나 현지에 잔류한 동포들이 더 많았다.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는 냉전체제 시작에 따라 돌아올 길이 막혔고, 일본동포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불안 등 복잡한 국내외 사정으로 일본에 남았다. 미국동포는 이주의 배경이 달라 바로 귀환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지에 잔류했다. 재외동포의 귀환은 냉전체제의 해소와 함께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중국, 구소련 동포에게 한·중수교, 한·소수교가 이어

지면서 한국 방문길이 대거 열렸기 때문이다. 맨 먼저 중국동포가 귀환 이주를 시작한 데 이어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귀환했다. 이어서 1960년대부터 해외로 이주한 미주동포가 돌아왔다.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부터 귀환 이주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 연 3천~4천여 명 규모까지 늘었다가 2015년부터 2천 명 이하로 줄면서 현재는 1천 명 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3-2>.

<표 3-2> 해외 이주자 및 귀환 이주자 추이

<단위: 명>

연도	미국(A)	기타 국가(B)	이주자 총계(A+B)	귀환 이주자 총계
1984	25,820	5,291	31,111	-
1985	21,147	6,646	27,793	-
1986	30,548	6,549	37,097	-
1987	26,282	8,516	34,798	-
1988	24,466	7,020	31,486	-
1989	21,336	4,936	26,272	-
1990	19,922	3,392	23,314	-
1991	12,754	4,679	17,433	-
1992	11,473	6,454	17,927	-
1993	8,133	6,344	14,477	-
1994	7,975	6,629	14,604	-
1995	8,535	7,382	15,917	-
1996	7,277	5,672	12,949	-
1997	8,205	4,279	12,484	-
1998	8,734	5,240	13,974	-
1999	5,360	7,295	12,655	-
2000	5,244	10,063	15,307	-
2001	4,565	7,019	11,584	-
2002	4,167	7,011	11,178	-
2003	4,200	5,309	9,509	-
2004	4,756	5,003	9,759	-
2005	5,083	3,194	8,277	-
2006	3,152	2,025	5,177	-
2007	2,227	1,900	4,127	-
2008	1,034	1,259	2,293	-
2009	599	554	1,153	-
2010	552	329	881	4,199
2011	615	134	749	4,164
2012	445	93	538	3,892
2013	239	63	302	3,621

2014	177	70	247	3,561
2015	214	49	263	2,733
2016	362	93	455	2,478
2017	986	573	1,559	2,046
2018	3,257	3,182	6,439	1,653
2019	2,047	2,346	4,393	1,478
2020	1,045	1,125	2,170	1,676
2021	1,066	1,133	2,199	1,872
2022	1,301	1,586	2,887	1,736

자료: 외교부(2023). 해외이주신고. (1984-91년, 외교부 집계, 1992-95년, 한국국제협력단 집계, 1996.1월 이후, 외교부 집계임. 2017년 이후 통계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외에 현지 이주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집계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 제2절 미국동포의 이주과 귀환

### 1. 미국동포의 이주

구한말 고종의 재위기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한 한인 중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도착한다. 이후 1905년까지 총 7천226명이 이민한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16).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에 하루 16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이주 생활을 시작한다. 이주자의 대부분이 독신 남자여서 한국에서 데려간 1천여 명의 ‘사진신부’는 한인 이주사의 상징이 됐다.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자 미국으로의 첫 이주였다.

미국동포들은 생활에 적응하면서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지역은 물론 일부는 유타, 와이오밍 등 중서부까지 진출하여 농장, 광산 등에서 일한다(이정면·최혁, 2003). 1945년 해방 무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이 시기에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박용만 등 걸출한 인물들이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안창호는 국민회, 흥사단을 결성했고, 이승만은 동지회를 외교적 능력을 과시했으며,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군사적 힘을 통한 국권의 회복을 도모했다.

첫 이주 이후 중단됐던 미국 이민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급증한다.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전쟁신부로 불리는 국제결혼자, 여기에 입양아, 유학생

등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국제결혼자와 입양아는 전쟁 후에도 계속 이주가 이어져 2002년까지 각각 10만여 명씩 총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윤인진, 2005). 국제결혼자들과 입양아들은 양부모나 남편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하와이 이주와 나중에 이어지는 이주가 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국제결혼자와 유학생 그룹은 초청이민 자격을 갖게 되면서 한국의 가족들을 불러들여 미국 동포사회가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광규, 2000).

한인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된 것은 1965년 미국이 아시아인 이주를 금하는 법을 폐지하고 쿼타제를 골자로 한 새 이민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이른바 ‘아메리칸드림’으로 불리는 이민 열풍이 불게 된 계기이다. 1965년부터 약 5년 동안 의사, 간호사, 유학생들이 이에 힘입어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어서 1970년대부터는 이주민이 매년 3만여 명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윤인진, 2005). 이 시기의 미국 이주자들은 한국 이주사에서 꿈과 미래를 찾아 가장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한다. 오늘날 미국동포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이주한 사람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Min, Pyong G. (2011)는 이 시기 한인들의 미국 이주의 배경을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배출요인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낮은 생활 수준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7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51달러에 불과했고 10년 뒤인 1980년에는 1천355달러로 성장했으나 이는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두 번째 요인은 군사독재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정, 정치적 자유의 부재,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으로 많은 한인이 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세 번째 요인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도 이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의 여건은 한인을 끌어들이는 주요 흡인요인이었다(Min, 2011).

그러나 미국 이주 열풍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식기 시작한다. 2000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한 데다 1987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등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Min, 2011). 미국동포가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이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느 동포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포사회도 많은 차별과 아픔을 겪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429LA폭동(1992.4.29.) 사건이다. 이 사건은 흑인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백인경찰이 무죄 방면되자 흑인들이 격분하여 발생한 폭동이다. 그러나 흑백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의 불똥이 미국동포사회를 튀면서 동포 업소 2천280개가 방화약탈을 당하고 총 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장태한, 2002). 이 사건으로 미국동포들은 정치력 부재의 한계를 통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며 다른 소수민족과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는 등 정치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미국동포들은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국에 기여한다. 우선 안창호, 이승만 등을 비롯한 독립운동은 자금 등 미국동포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전개됐다. 또한 1970년대 동포 과학자, 기술자 등 고급 두뇌들이 돌아와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는다. 2007년에는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중군위안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한겨레신문, 2007.7.31; 조양현, 2008). 2014년에는 일본해로 서술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함께 쓰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sup>18)</sup>(김재기 등, 2015). 이러한 동포들의 활약은 한국 공공외교사의 획기적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동포사회는 120년의 이주역사를 통해 양적, 질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동포의 수는 총 262만여 명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표 3-3>, 이를 거주자격별로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국적 동포가 1,523,823명이며, 재외국민으로서 미국 영주권자가 440,171명, 일반체류자가 607,333명, 유학생이 44,092명이다<표 3-4>. 현재 동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이민 1세를 넘어 2~4세로 넘어가는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동포가 한글, 한국역사, 문화를 잃어가며 민족정체성이 약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18)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를 비롯한 버지니아주 미국동포가 미국 교과서의 동해병기 문제를 공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고, 주 의회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법안 통과에 기여한 사례로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표 3-3〉 미국 동포현황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7	2019	2021	2023	백분율(%)
총계	2,485,532	2,540,156	2,626,761	2,615,419	100
주미국(대)	203,481	179,780	189,474	157,778	5.51
주뉴욕(총)	447,193	421,222	360,053	304,459	10.64
주로스앤젤레스(총)	665,185	676,079	664,414	662,383	23.14
주보스턴(총)	50,204	56,351	58,488	60,964	2.13
주샌프란시스코(총)	206,651	227,649	245,173	281,372	9.83
주시애틀(총)	160,555	160,181	176,983	184,445	6.44
주시카고(총)	297,991	325,135	357,993	347,900	12.15
주애틀랜타(총)	239,733	242,544	242,093	266,709	9.32
주호놀룰루(총)	66,649	66,824	70,974	76,064	2.66
주휴스턴(총)	141,633	178,145	175,446	99,824	3.49
주델러스(출)	-	-	-	86,825	3.03
주앵커리지(출)	6,257	6,246	6,228	6,987	0.24
주필라델피아(출)	-	-	79,442	72,639	2.54
주하갓나(출)	6,720	6,826	7,016	7,070	0.25

자료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현황(2023)

〈표 3-4〉 거주자격별 미국 동포현황

〈단위: 명〉

지역별 /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440,171	607,333	44,092	1,091,596	1,523,823	2,615,419
주미국(대)	27,582	11,774	2,574	41,930	115,848	157,778
주뉴욕(총)	50,945	52,882	7,724	111,551	192,908	304,459
주로스앤젤레스(총)	116,095	98,048	7,616	221,759	440,624	662,383
주보스턴(총)	11,797	15,172	3,669	30,638	30,326	60,964
주샌프란시스코(총)	37,417	120,274	2,949	160,640	120,732	281,372
주시애틀(총)	55,398	12,556	1,772	69,726	114,719	184,445
주시카고(총)	40,565	86,018	9,463	136,046	211,854	347,900

주애틀랜타(총)	42,621	100,651	4,689	147,961	118,748	266,709
주호놀룰루(총)	3,435	28,924	432	32,791	43,273	76,064
주휴스턴(총)	24,181	33,508	734	58,423	41,401	99,824
델러스(출)	18,366	23,738	260	42,364	44,461	86,825
주앵커리지(출)	670	45	20	735	6,252	6,987
주필라델피아(출)	9,056	21,220	2,187	32,463	40,176	72,639
주하갓나(출)	2,043	2,523	3	4,569	2,501	7,070
	440,171	607,333	44,092	1,091,596	1,523,823	2,615,419

자료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현황(2023)

## 2.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는 중국,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처럼 막혔던 교류 통로가 한·중수교, 한·소수교와 같이 갑자기 열리면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흐름은 없다. 미국동포들은 1970년대 한국의 절대적 빈곤에 따른 경제적 요인, 자녀교육 등 사회적 요인, 군사독재와 전쟁 위험 등에 따른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귀환 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꾸준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귀환 이주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집계 기준의 변동 등으로 전체 귀환 이주 규모는 물론 미국에서의 귀환 이주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대략 1990년대 5천여 명, 2009년 무렵 3천~4천 명, 2015년부터 1천~2천 명 수준을 기록하는 귀환 이주자 중 절반 이상이 미국동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서울신문(2012.5.3.) 보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으로 귀환 이주한 4천257명의 동포 중 미국동포가 2천122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여기에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통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2019년도 연례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A)을 수령하는 미국동포가 6천817명으로 미국 사회보장국이

한국과 관련된 통계를 처음 공개한 2006년의 73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사회보장국, 2020., 미주중앙일보, 2020.8.22.서 재인용). 결국 한국에 실질적으로 귀환하는 이주자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으며 이들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동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5〉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 받는 미국 동포

연도	미국 동포 수(명)
2006	732
2013	3,709
2014	4,144
2015	4,450
2016	4,826
2017	5,566
2018	6,155
2019	6,817

자료 : 미국 사회보장국(SSA) 2019년도 연례 통계보고서(미주중앙일보서 재인용)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은 먼저 전술한 이주 요인이 해소된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민주화에 따른 독재체제의 종결, 한국의 교육여건 상승,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생활고에 따른 경제적 요인, 자녀 교육 등 사회적 요인, 군사독재와 전쟁 위협 등의 정치·군사적 요인이 대거 해소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부터 대거 이주한 미국동포가 경제적 성취, 자녀 교육 욕구 등 이주의 목적을 상당 부분 실현하고 은퇴하는 생애주기적 요인이 겹친 것도 귀환 이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1992년 LA 흑인폭동, 최근의 아시아인 증오범죄의 급증, 미국사회의 이주민 배척 분위기 고조 등 고질적인 인종차별과 ‘아메리칸드림’이 더 이상 동포의 꿈이 될 수 없는 미국의 경제적 여건 등도 귀환 이주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미국동포는 귀환 이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Pwe Research Center)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7,006명(한국계 미국인 1,146명 포함)을 조사한 결과, 미국동포의 26%가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주중앙

일보, 2023.7.20.). 미국동포 4명 중 1명이 귀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대와 2~3세대 간의 차이도 없었다. 다른 나라의 이주자의 경우, 인도계 미국인이 33%, 필리핀계 미국인이 31%, 베트남계 미국인이 20%, 중국계 미국인은 16%로 미국동포는 중간 정도 수준의 귀환 이주 의향을 보였다. 귀향 의향이 있는 미국동포들은 그 이유로 ‘한국의 보건 혜택(24%)’, ‘친구와 가족(22%)’을 꼽았고, ‘더 안전한 곳’, ‘부모님 모시고 싶어’, ‘문화적으로 친숙해서’에 대한 응답이 각각 10%를 차지했다. 퓨리서치가 조사한 대상은 153만여 명의 미국 국적자인 동포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귀환 이주 의향은 26%보다 훨씬 높은 30~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30% 정도로 가정하면, 미국동포 262만여 명 중 약 80만여 명이 귀환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9)</sup>. 또한 실제 이주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합한 19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약 59만 명 정도가 귀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귀환 이주 의향이 실제 귀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60만여 명의 미국동포가 귀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만큼 미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를 미리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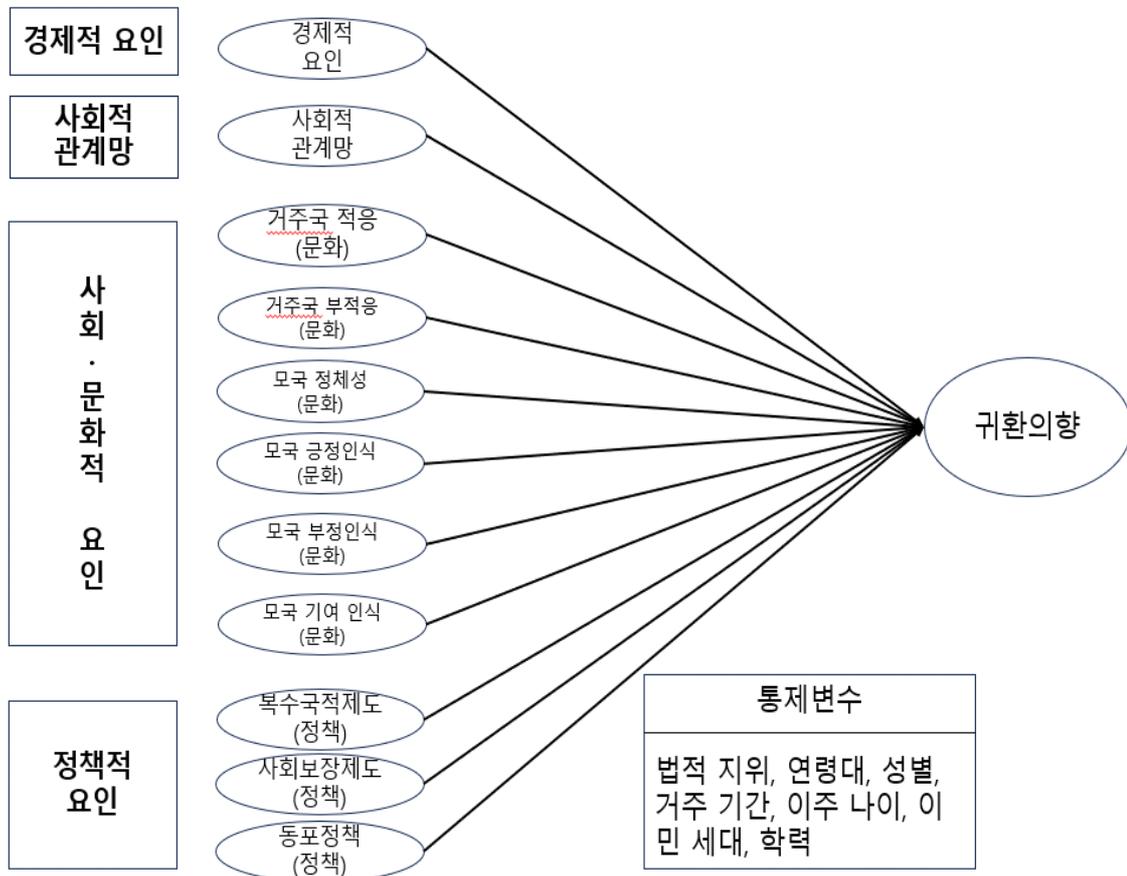
19)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은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이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포 그룹이나 애초 이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에 비해서는 귀환 이주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제4장 연구의 설계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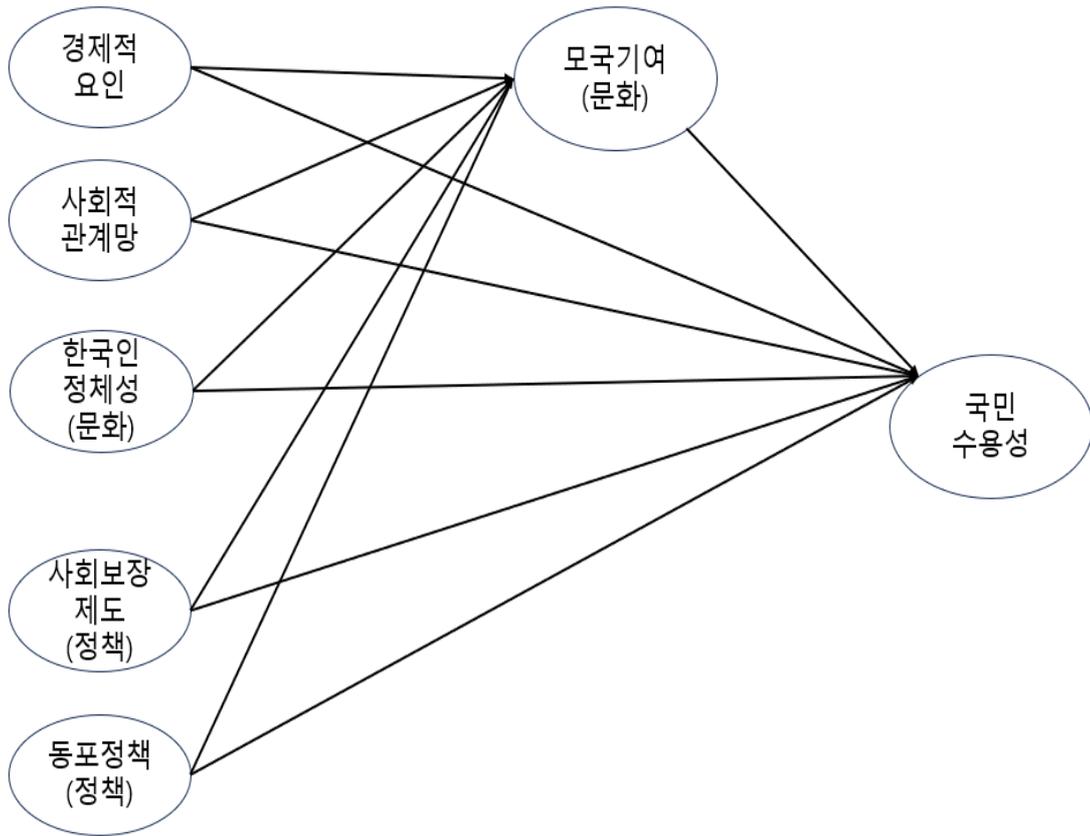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모형을 <그림 4-1>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4-1>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연구모형

둘째는 미국동포의 귀환 이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모국 기여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모형은 <그림 4-2>와 같이 제시했다.



<그림 4-2> 국민 수용성 연구모형

각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요인은 귀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설정했다. 귀환 의향의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위변수에는 거주국 적응, 거주국 부적응, 모국 정체성, 모국 긍정인식, 모국 부정인식,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는 복수국적, 사회보장제도, 동포정책을 설정했다. 이어서 귀환 이주의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은 귀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같은 요인으로 설정했다. 이는 설문의 응답 주체가 달라 독립 변수의 영향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두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상위 독립변수의 요인은 같도록 구성했으며, 미국 동포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요인들은 별도로 추가 설정했다.

##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양자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고찰하여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앞서 귀환 이주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질문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미국동포의 귀환 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둘째 “귀환 미국동포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표 4-1>.

<표 4-1> 가설 설정

가설		가설의 내용
대상		미국동포
가설1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미국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설3-1	미국동포의 거주국 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미국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미국동포의 모국 정체성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미국동포의 모국 긍정인식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5	미국동포의 모국 부정인식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6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설4-1	미국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미국동포의 사회보장제도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미국동포의 일반 동포정책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대상</b>		<b>국민</b>
	가설1	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1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사회적 관계망은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8-1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8-2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2절 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귀환에 따른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2개 설정하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를 설정한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들은 네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했는데, 네 가지 요인은 2개의 종속변수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정된다. 미국동포와 국민의 응답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설문문의 경우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 인식 요인이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 1. 종속변수

#### 1)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귀환 이주 의향은 단순히 ‘출신국으로 돌아갈 의향’을 묻는 한 종류의 질문으로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정용문, 2020).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질문에 단지 ‘그렇다’와 ‘아니다’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선에서 측정됐다. 정용문(2020)은 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수의 질문을 통해 귀환 이주 의향을 입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1)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2)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립다.’, ‘3) 나는 한국의 친구가 그립다.’는 세 가지 질문을 설정했다. 첫 번째 질문은 귀환에 대한 계획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서 이주이론에서 소개한 사회적 연결망 요인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귀환 의향에 관한 질문이다. 미국동포의 귀향 의향은 한국 국민의 수용성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용문(2020)의 접근 방식이 귀환 의향을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점, 질문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질문을 채택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 2)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아직 측정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정 방식의 분석 결과에 따라 종속변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귀환 의향에 대한 측정과 마찬가지로 주로 한 가지 질문에 의한 단일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측정 대상은 실질적으로 귀환하게 된 사례가 많은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였다. 질문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살기를 원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재외동포가 국내에 장기체류 또는 정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방식이다(재외동포재단, 2007, 2009, 2011, 2019). 응답은 ‘찬성’, ‘반대’, ‘사안에 따라 다름’ 정도로 사실상 하나의 질문에 대한 찬반 수준의 답변이어서 국민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부족했다. 윤인진 등(2015)은 이를 ‘한국 체류 수용도’로 측정했는데 이 역시 앞선 연구와 같이 단일한 차원의 측정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국민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귀하는 미국동포가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기존 연구에 따른 질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 귀하는 미국동포의 귀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모국 입장에서 귀환의 필요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3) 귀하는 미국동포가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주한 만큼 귀환도 큰 제약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귀환자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설정한 질문이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귀환 이주와 국민 수용성에 대해 논한 바를 기초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네 가지로 범주화했다.

## 1)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 관련 변수

###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귀환 이주 의향에 임금, 고용, 빈곤, 거주국의 경제침체, 실업, 생산실패, 인플레이션, 경제적 이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경제적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Gmelch(1980)는 귀환 이주 동기로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모국애, 거주국 차별 요인을 들었고, Cassarino(2004)도 경제적 요인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귀환의 원인으로 거주국에서의 기대수익 실패를 들었고(신고전주의경제학적 접근), 또 한편으로는 거주국에서의 송금, 저축, 기술 습득을 귀환 요건의 충족(신이주경제학적 접근)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Reyes(1997)의 실망 이론과 목표소득이론에 따른 귀환 요인도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실망 이론에 따른 귀환은 이주자가 거주국 정착에 실패하여 돌아오는 경우이고, 목표 소득이론은 거주국에서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여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귀환하는 경우로 이 경우 귀환 이주는 성공의 결과로 평가된다. 경제적 요인에는 귀환자의 ‘생활 수준’, ‘소득’, ‘자산’을 변수로 설정한다. 경제적 요인의 변수가 귀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높거나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경우 이주 목적이 정착이나, 귀환 이나에 따라 의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2)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귀환 이주자가 형성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귀환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이다(Massey, 1990).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어 귀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면 이주 비용 감소 등 유리한 점이 많아 영구적 이주가 늘게 되어 귀환이 연기되거나 위축된다(Greenwood, 1969; Mines & Massey, 1985). 반대로 출신국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귀환 의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Cassarino(2004)도 거주국과 출신국에서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주목했다. Gmelch(1980)는 귀환 이주 동기로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으로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은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포함되는데 모국의 직계가족 거주 여부, 친인척, 친구의 많고 적음의 요소로 구성한다.

### (3) 사회적·문화적 요인

이주자에게 있어 출신국과 거주국은 처음부터 매우 다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으며, 이주 기간에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귀환 이주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매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사회적·문화적 요인은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출신국과 거주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Gmelch(1980)는 거주국 차별 요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과 같은 모국애를 귀환 이주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Cassarino(2004)도 귀환을 상황적,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맥락의 문제로 인식하여 거주국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귀환의 주요 동기로 꼽았다. 재외동포재단(2013, 2019)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에서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소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국적, 혈통, 한국민 동질감, 한민족 자부심 등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거주국 적응 요인, 거주국 부적응 요인, 모국 정체성, 모국 긍정 인식, 모국 부정 인식,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국 적응 요인의 구체적 변수로는 영어 구사력, 역사·문화 친숙도, 사회 친숙도, 미국의 사회보장 만족도, 그리고 거주국 부적응 요인으로는 인종차별, 주류사회 진출, 미국사회 동화 요인을 설정한다. 모국 정체성 요인은 한국어 구사력, 역사·문화 친숙도, 사회 친숙도를 설정한다. 모국 긍정 인식 요인에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 부상, 사회적, 문화적 선진국 부상, 외교적, 군사적 강국 부상, 한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포함한다. 모국 부정 인식은 한국의 경쟁열, 물가, 외부인 차별 요인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는 한국경제 발전 기여, 한국 외교 기여, 한국문화 세계화 기여 요인을 설정한다.

### (4)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귀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동포 및 귀환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적 요인을 말한다.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한국 국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관적 감정과 판단 외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귀환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윤인진 등(20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 등 일련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항목은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외국민특별전형, 복수국적자의 병역, 병역기피자의 출입국 등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이었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편법 특혜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출하거나 거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조사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외동포의 생각과 정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요인이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인진 등(2020)의 조사 대상 항목 중 일부를 채택하여 복수국적,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를 채택하고, 여기에 동포정책을 더하여 정책적 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립변수를 구성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귀환 의향의 독립변수 구성 요인

분석 요인	하위 분석 요인	세부 분석 요인	연구자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생활수준	-Massey et al., (1998), Todaro & Maruszko( 1987), Lewis(1954), Ranis & Fei( 1961), Harris & Todaro(1970), Cassarino(2004), Stark & Levhari(1982), Stark(1984), Katz & Stark(1986, 1987), Lauby & Stark(1988), Piore(1979), Castles & Kosack(1973), Cohen(1987), Sassen(1988), Wallerstein(1974, 1979, 1984), 김영철(2016), 정용문
		소득	
		자산	

			(2020), 신상화(2016), 오정은 등(2015, 2016), 최강화·오병섭(2020)	
사회적 관계망 요인		직계부모 거주	-Massey et al., (1987), Samers(2013), Taylor(1986), Massey & Garcia Espana(1987), Massey(1990a, 1990b, 1998), Prothero(1990), Cassarino(2004), 김영철(2016), 신상화(2016), 정용문(2020), 석현호(2020),	
		친인척 거주		
		친구(지인) 거주		
사회·문화 적 요인	거주국 적응	영어 구사력	-김영철(2016), 정용문(2020), 최강화·오병섭(2020), Cassarino(2004), 오정은 등(2015, 2016)	
		미국 역사·문화 친숙도		
		미국사회 친숙도		
	거주국 부적응	인종차별		
		주류사회 진출		
		미국사회 동화		
	모국 정체성	한국어 구사력	- Castles & Miller(1995), 김영철(2016), 최강화·오병섭(2020), 신상화(2016),	
		한국역사·문화친숙도		
		한국사회 친숙도		
	모국 긍정 인식	정치적·경제적 인식	사회적·문화적 인식	-Massey et al., (1987), Cassarino(2004), 김영철(2016)
			외교적·군사적 인식	
			높은 삶의 질	
모국 부정 인식		치열한 경쟁		
		물가 상승		
		외부인 차별		
모국기여	한국 경제발전	Ratha, D. et. al.(2011). Tilly, C. (2007). 조양현(2008),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재외동포재단(2013, 2015, 2017)		
	한국 국제정치·외교발전			
	한국문화 세계화			
정책적 요인	복수 국적	제도 인지 여부	윤인진 등(2020), 오정은 등(2015, 2016) Castles & Miller, 1995), Cassarino(2004)	
		신청 의향		
		대상 확대		
	사회보장 제도	기초연금 이해도		
		기초연금 수혜 당위성		

		건강보험제도 이해도	
		건강보험 혜택 만족도	
	동포 정책	미국동포 지원 적극성	
		한글, 역사문화 교육 지원	
		교류·네트워크 확대 지원	
		동포단체 활동 지원	

자료 : 연구자 작성

## 2) 국민 수용성 관련 변수

### (1) 경제적 요인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은 귀환이 한국 국민에게 부담 요인인지, 도움 요인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윤인진 등(2020)에 따르면 국민은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과 60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혜택의 편법 수혜 등에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국동포의 귀환 이주를 국민이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수용성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동포의 생활 수준, 연간소득, 자산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재단(2015, 2019)도 내국인 인식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소득수준이나 거주국의 국민소득을 측정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외동포의 경우 국민의 호감도도 높게 나타난 점이다(재외동포재단, 2015). 이는 해당 거주국의 재외동포가 귀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귀환 청년층 취업은 한국의 취업난으로 인해 수용성 저해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선진국 청년의 경우 선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과 국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2) 사회적 관계망 요인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이들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동포

연결망 요인을 의미한다. 이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귀환 이주자를 수용하는 국민에게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재외동포인 가족, 친인척, 친구 등 가깝게 접촉하는 지인이 많다면 미국동포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져 이들이 귀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재외동포에 대해 더욱 친숙하게 느껴져 역시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수용자의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더욱 커지거나 적어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재단(2011, 2013, 2015, 2017, 2019)도 친밀도, 친근감, 접촉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파악했다. Gmelch(1980)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과급력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으로 재외동포 형제·자매 등 친인척, 친구 등 지인의 많고 적음, 해외 체류 경험을 설정한다. 세부 변수를 미국동포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재외동포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감정이입에 따라 미국동포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 사회·문화적 요인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은 귀환 이주자를 포용, 소통, 차별, 배제하려는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귀환 이주자가 한국어나 한국문화·역사에 익숙하다면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이 높아져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혈통이 한국인이라면 동질감은 더해져 한민족 의식이 높아지고 역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들 요인은 한국인 정체성과 가까운 개념들이다. 반면 동포와 외국인 사이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많으면 수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재단(2011, 2013, 2015, 2017, 2019)도 이러한 요인들을 재외

동포의 한민족 동질감, 소속감, 기여도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조사해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한국인 정체성 요인(한국어, 한국문화·역사, 국적, 혈통)을 설정한다. 사회관계망 요인에서와 달리 ‘미국동포’를 ‘재외동포’로 설문 대상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모국 기여 인식 요인에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와 다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 (4) 정책적 요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귀환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연구는 윤인진 등(2020)이 처음이다. 이들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외국민특별전형, 복수국적자의 병역, 병역기피자의 출입국 등 6개의 쟁점 요인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외동포가 편법 특혜를 받거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정책 요인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쟁점 중에서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요인을 도출하고 여기에 미국 동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동포정책(역사문화 교육 지원, 교류·네트워크 확산 지원, 동포단체 활동 지원) 요인을 더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립변수를 구성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국민 수용성 독립변수 구성 요인

분석 요인	하위 분석 요인	세부 분석 요인	연구자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경제적 여건	-Massey et al., (1998), Todaro & Maruszko( 1987), Lewis(1954), Ranis & Fei( 1961), Harris & Todaro(1970), Cassarino(2004), Stark & Levhari(1982), Stark(1984), Katz & Stark(1986, 1987), Lauby & Stark(1988), Piore(1979), Castles &
		소득	

		자산	Kosack(1973), Cohen(1987), Sassen(1988), Wallerstein(1974, 1979, 1984), 김영철(2016), 정용문(2020), 신상화(2016), 오정은 등(2015, 2016)최강화·오병섭(2020)
사회적 관계망 요인		재외동포 형제·친인척	-Massey et al., (1987), Samers(2013), Taylor(1986), Massey & Garcia Espana(1987), Massey(1990a, 1990b, 1998), Prothero(1990), Cassarino(2004), 김영철(2016), 신상화(2016), 정용문(2020), 석현호(2020)
		재외동포 친구(지인)	
		해외 체류경험	
사회·문화 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	한국어 사용	-Cassarino(2004), Castles & Miller(1995), Massey et al., (1987), 김영철(2016), 오정은 등(2015, 2016), 정용문(2020), 최강화·오병섭(2020)
		한국문화·역사 지식	
		국적	
		혈통	
정책적 요인	사회보장 제도	재외동포 기초연금 인지도	-윤인진 등(2020), 오정은 등(2015, 2016)Castles & Miller, 1995), Cassarino(2004)
		동포 기초연금 수혜 타당성	
		건강보험 동포 혜택 인지도	
		건강보험 동포 적용 타당성	
	동포정책	미국동포 역사·문화 교육 지원	
		미국동포 교류·네트워크 지원	
		동포단체 활동 지원	

자료 : 연구자 작성

### 3. 매개변수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주자가 출신국인 모국에 기여하는 방식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일본동포의 모국 기여는 9개 공관 기증, 모국 투자, 성금 등 수조 원에 달하고

(재외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미국동포는 고급 두뇌로서 모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종군위안부결의안, 동해병기법안의 미국 의회 승인 등 외교적으로도 많은 공헌도 했다(한겨레신문, 2007.7.31.;조양현, 2008).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모국 기여의 결과는 재외동포의 의사와 상관 없이 동포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가 모국의 발전, 국제 외교, 한국문화 확산, 독립운동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 수용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 지원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1, 2013, 2015). 따라서 재외동포가 모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의 한 축으로서 ‘모국 기여’가 국민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매개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위요인 중 미국동포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경제발전, 국제외교, 한국문화 세계화)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4-4〉 국민 수용성 매개변수 구성 요인

분석 요인	하위 분석 요인	세부 분석 요인	연구자
사회·문화적 요인	모국기여 인식	경제발전	-Ratha, D. et. al.(2011). Tilly, C. (2007). 조양현(2008),재외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재외동포재단(2013, 2015, 2017)
		외교발전	
		한국문화 세계화	

### 제3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 1. 조사 대상 및 설문 구성

본 연구는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이를 수용하는

한국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미국동포와 국민이다. 미국동포의 경우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동포, 국민은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최종 설문지는 미국 동포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를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성했다. 종속변수는 미국동포의 경우 모국 귀환 의향, 그리고 국민의 경우 미국동포 귀환의 수용성으로 구성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설문지의 세부 항목은 <표 4-5>, <표 4-6>과 같다.

<표 4-5> 측정 항목(미국동포)

변수	하위 요인	변수 명	측정 항목	선행연구
귀환 의향 (종속 변수)		A1-1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	정용문(2020)
		A1-2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다	
		A1-3	나는 한국의 친구(아는 사람)가 그리울 때가 있다	
경제적 요인		A2-1	미국 사회에서 나의 생활 수준은 높은 편이다	-Massey et al., (1998), Harris & Todaro(1970), Cassarino(2004), Piore (1979), Castles & Kosack(1973), 김 영 철 (2016), 오정은 등 (2015, 2016), 정용문 (2020), 신상화 (2016), 최강화·오병섭(2020)
		A2-2	나의 가구의 연간소득은 높은 편이다	
		A2-3	나는 미국에서 만족할만한 자산을 축적했다	
사회적 관계망		A3-1	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이 한국에 많이 산다	-Massey et al., (1987),

요인				Samers(2013), Taylor(1986), Prothero(1990), Cassarino(2004), 김 영 철(2016), 신상화(2016), 정용문(2020)
		A3-2	형제·자매 등 나의 친인척이 한국에 많이 산다	
		A3-3	잘 아는 친구(직계가족, 친인척 제외)들이 한국에 많이 산다	
사회·문화적 요인	거주국 적응	A4-1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Cassarino(2004) Castles & Miller(1995), Massey et al., (1987), Ratha, D. et. al.(2011). 김 영 철(2016), 오정은 등(2015, 2016), 정용문(2020), 최강화·오병섭(2020), 조양현(2008), 재일 동포 모국 공적 조사 위원회(2008). 재외 동포재단(2013, 2015, 2017)
		A4-2	나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A4-3	나는 미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거주국 부적응	A5-1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A5-2	미국동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사회 진출은 어렵다	
		A5-3	시간이 흘러도 동포사회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국 정체성	A6-1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A6-2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A6-3	나는 한국인들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모국 긍정 인식	A7-1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A7-2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A7-3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다	
		A7-4	한국은 삶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모국 부정 인식	A8-1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A8-2	한국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모국 기여	A9-1	미국 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A9-2	미국 동포는 한국의 국제정치·외교에 기여한다		
	A9-3	미국 동포는 K팝 확산 등 한국의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		
정책적 요인	복수국적	B1-1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윤인진 등(2020), 오정은 등(2015, 2016), Castles & Miller,
		B1-2	한국이 글로벌화에 잘 대응하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혀 주기 바란다	
		B1-3	65세 이상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B2-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한국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을 받는 제도를 잘 안다	1995), Cassarino(2004)
		B2-2	미국동포(영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안다	
		B2-3	재외동포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만족한다	
	동포정책	B3-1	한국은 미국동포를 적극 지원한다	
		B3-2	한국은 미국 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B3-3	한국은 미국 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B3-4	한국은 미국의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 연구자 작성

〈표 4-6〉 측정 항목(국민)

변수	하위요인	변수명	측정 항목	선행연구
국민수용성		A1-1	미국 동포가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재외동포재단(2007)
		A1-2	미국 동포의 귀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2-3	미국 동포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처럼 귀환도 큰 제약 없이 가능하다	
경제적요인		A2-1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중국동포나 러시아·CIS지역 동포에 비해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췄다	-Massey et al., (1998), Harris & Todaro(1970), Cassarino(2004), Piore (1979), Castles & Kosack(1973), 김영철(2016), 오정은 등(2015, 2016), 정용문(2020),
		A2-2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	
		A2-3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다	

				신상화(2016), 최강화·오병 섭(2020)
사회적 관계망 요인		A3-1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형제·자매 등 재외동포 친인척이 많은 편이다	-Massey et al., (1987), Samers(2013) ,Prothero (1990), Cassarino(200 4), 김 영 철 (2016), 신상 화(2016), 정 용문(2020)
		A3-2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재외동포 친 구나 지인이 많은 편이다	
		A3-3	나는 해외 체류 또는 방문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편이다	
사회·문 화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	A4-1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Cassarino(2004) Castles & Miller(1995), Massey et al., (1987), Ratha, D. et. al.(2011). 김 영 철(2016), 오정은 등 (2015, 2016), 정용문(2020), 최강화·오병섭 (2020), 조양현(2008), 재일동포모 국공적조사 위원회(2008). 재외동포재단 (2013, 2015, 2017)
		A4-2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4-3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A4-4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인 혈 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국 기여 인식	A5-1	미국 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A5-2	미국 동포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	
		A5-3	미국 동포는 K-Pop 확산 등 한국문화가 세계적 으로 확산하는 기여한다.	
정책적 요인	사회보 장제도	B1-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 을 받게 되는 제도에 대해 잘 안다	-윤인진 등 (2020),오정은 등(2015, 2016), Castles
		B1-2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생활한	

			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 Miller, 1995), Cassarino(2004)
		B1-3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 등 조건을 갖추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잘 안다	
		B1-4	미국 동포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B2-1	한국은 미국 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동포 정책	B2-2	한국은 미국 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B2-3	한국은 미국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 원한다	

자료 : 연구자 작성

##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동포의 경우 2023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민의 경우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시행했다. 설문지 설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민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동포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구글 설문(Google Form) 방식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예비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국민의 경우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같은 설문 방식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미국동포가 74명, 국민은 66명이었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타당성과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요인과 문항을 제거, 수정한 뒤 본 설문의 내용을 구성했다.

본 설문조사는 2023년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 인터넷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미국동포 조사의 경우 전문업체의 온라인 조사 방식을 활용하되 온라인 설문지의 배포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했다. 미국동포의 표본은 연구자가 전 재외동포재단 재직 시 접촉한 한인회, 한글학교, 동포경제단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해 추출했다. 국민 설문조사는 서울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 연령 등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해 확보한 표본을 사용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동포는 총 유효 설문 329건, 국민은 748건을 확보했다.<sup>20)</sup>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했으며, 변수 정제를 위한 신뢰도와 요인분석(타당성 검증)을 수행했다. 그리고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했다. 자료의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IBM SPSS 22 Version)와 AMOS(IBM SPSS Amos 26 Version)를 사용했다.

---

20) 미국 동포의 응답 건수는 동포 인구에 비해 LA지역이 많이 표집되는 특징을 보임. 이는 연구자가 2016년부터 2년 동안 현지에서 근무하여 근접 접촉 동포가 많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제5장 실증 분석

### 제1절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분석 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미국동포의 귀환 수용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로 수집된 관측치 수는 총 329명이다. 그리고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표본 중에서 거주지역은 로스앤젤레스시가 116명으로 전체 비율의 35.5%를 차지했고 시애틀시가 9명으로 가장 적었다. 법적지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251명으로 전체 빈도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의 경우 50-6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남성이 약 42.6%로 여성보다 약간 비율이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성비에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았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3.6%로 낮았지만 10-20년 미만부터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이 20% 내외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주 나이는 19-29세, 30-39세 때 이주한 경우가 243건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민 세대의 경우 이민 1세대의 경우가 7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 1.5세대, 이민 2세대 순의 빈도를 보였다. 직업의 경우 자영업이 73명으로 22.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이 4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미국동포)

변수명	빈도 수
거주 지역	로스앤젤레스시: 116(35.3%), 뉴욕시: 22(6.7%), 시카고시: 14(4.3%), 샌프란시스코시: 17(5.2%), 애틀랜타시: 13(4.0%), 워싱턴 D.C: 17(5.2%), 시애틀시: 9(2.7%), 휴스턴시: 5(1.5%), 그 외: 116(35.3%)

법적 지위	미국 시민권자: 251(76.3%),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78(23.7%)
연령대	30대: 9(2.7%), 40대: 54(16.4%), 50대: 98(29.8%), 60대: 168(51.1%)
성별	남성: 140(42.6%), 여성: 189(57.4%)
거주기간	5년 미만: 4(1.2%), 5-10년 미만: 8(2.4%), 10-20년 미만: 60(18.2%), 20-30년 미만: 95(28.9%), 30-40년 미만: 80(24.3%), 40년 이상: 82(24.9%)
이주 나이	현지태생: 1(0.35%), 18세 이하: 30(9.1%), 19-29세: 142(43.2%), 30-39세: 101(30.7%), 40-49세: 31(9.4%), 50-59세: 8(2.4%), 60세 이상: 16(4.9%)
이민 세대	이민 1세대: 232(70.5%), 이민 1.5세대(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민한 경우): 89(27.1%), 이민 2세대: 8(2.4%)
직업	자영업: 73(22.2%), 사무/기술직: 42(12.8%), 경영/관리직: 25(7.6%), 자유/전문직: 68(20.7%), 판매/영업 서비스직: 10(3.0%), 기능/작업직: 5(1.5%), 생산/운수직: 1(0.3%), 대학(원)생: 4(1.2%), (전업)주부: 35(10.6%), 은퇴/무직/구직 중: 43(13.1%), 기타: 23(7.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0.3%), 고등학교 졸업: 20(6.1%),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42(12.8%), 대학 졸업: 141(42.9%), 대학원 졸업: 125(38%)

## 2.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요인별 데이터 명칭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요인별 데이터 명칭 내역

변수	하위 요인	데이터 명칭
귀환 의향(중속변수)		A1-1, A1-2, A1-3
경제적 요인		A2-1, A2-2, A2-3
사회적 관계망 요인		A3-1, A3-2, A3-3
사회·문화적 요인	거주국 적응	A4-1, A4-2, A4-3
	거주국 부적응	A5-1, A5-2, A5-3
	모국 정체성	A6-1, A6-2, A6-3

	모국 긍정인식	A7-1, A7-2, A7-3, A7-4
	모국 부정인식	A8-1, A8-2
	모국 기여	A9-1, A9-2, A9-3
정책적 요인	복수국적	B1-1, B1-2, B1-3
	사회보장제도	B2-1, B2-2, B2-3
	일반 동포정책	B3-1, B3-2, B3-3, B3-4

### 1) 귀향 의향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다’ 는 문항이 3.48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1.143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는 한국의 친구(아는 사람)가 그리울 때가 있다’ 는 문항의 평균이 3.43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1.052로 나타났다. 귀향 의향을 포괄적으로 묻는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 는 문항은 평균이 2.83으로 낮았으며, 표준편차는 1.266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큰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귀환 의향 평균은 각 설문의 평균치로 도출되었으며 평균은 3.25이었고 그 표준편차는 0.926으로 분석됐다. 귀향 의향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귀환 의향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1-1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	2.83	1.266	1	5
A1-2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다	3.48	1.143	1	5
A1-3	나는 한국의 친구(아는 사람)가 그리울 때가 있다	3.43	1.052	1	5
	A1(평균)	3.25	.926	1	5

### 2) 경제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미국 사회에서 나의 생활 수준은 높은 편이다’ 는 문항이 3.56으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0.771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의 가구의 연간소득은 높은 편이다’ 는 문항의 평균이 3.44로 첫 번째 설문 문항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0.90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자산 축적을 의미하는 설문 문항은 ‘나는 미국에서 만족할 만한 자산을 축적했다’ 는 문항의 평균은 3.16으로 세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 또한 1.103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그 분포가 훨씬 큰 수치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평균)은 평균 3.38, 표준편차는 0.856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4>과 같다.

**<표 5-4>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2-1	미국 사회에서 나의 생활 수준은 높은 편이다	3.56	.771	1	5
A2-2	나의 가구의 연간소득은 높은 편이다	3.44	.906	1	5
A2-3	나는 미국에서 만족할 만한 자산을 축적했다	3.16	1.103	1	5
	A2(평균)	3.38	.856	1	5

### 3) 사회적 관계망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이 한국에 많이 산다’ 는 문항은 3.28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표준편차는 1.544로 가장 값이 컸다. 이어서 ‘형제·자매 등 나의 친인척이 한국에 많이 산다’ 는 문항의 평균은 3.59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422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잘 아는 친구(직계가족, 친인척 제외)들이 한국에 많이 산다’ 는 문항의 평균은 3.68로 가장 높았다. 표준편차는 1.232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관계망(평균)의 평균은 3.38이고 표준편차는 0.918이었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사회적 관계망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3-1	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이 한국에 많이 산다	3.28	1.544	1	5
A3-2	형제·자매 등 나의 친인척이 한국에 많이 산다	3.59	1.422	1	5
A3-3	잘 아는 친구(직계가족, 친인척 제외)들이 한국에 많이 산다	3.68	1.232	1	5
	A3(평균)	3.51	1.209	1	5

4)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3.28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표준편차는 1.019로 가장 값이 컸다. 영어 구사능력의 평균은 가장 낮은 편은 반면, 분포도는 가장 넓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나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3.32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972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나는 미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는 문항의 평균이 3.54로 가장 높았다. 표준편차는 0.972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와 매우 유사했다. 거주국 적응(평균)의 평균은 3.38이고, 표준편차는 0.918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4-1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3.28	1.019	1	5
A4-2	나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3.32	.972	1	5
A4-3	나는 미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3.54	.972	1	5
	A4(평균)	3.38	.918	1	5

### 5)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부적응)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네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부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2.96으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표준편차는 0.944였다. 이어서 ‘미국 동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사회 진출은 어렵다’는 문항의 평균은 3.10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다. 표준편차는 0.937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시간이 흘러도 동포사회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다’는 문항의 평균은 3.0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944로 설문 문항들의 표준편차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한편 거주국 부적응(평균)의 평균은 3.02이고, 표준편차는 0.714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부적응) 기술통계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부적응)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5-1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96	.944	1	5
A5-2	미국동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사회 진출은 어렵다	3.10	.937	1	5
A5-3	시간이 흘러도 동포사회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3.01	.944	1	5
	A5(평균)	3.02	.704	1	5

### 6)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정체성)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모국정체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4.57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0.673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는 문항의 평균은 4.40으로 중간 정도였고 표준편차는 0.700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미국동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꽤 익숙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나는 한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3.93으로 가장 낮았으며, 표준편차는 0.970으로 분석됐다. 모국 정체성(평균)의 평균은 4.30이고, 표준편차는 0.660으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정체성)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정체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6-1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4.57	.673	1	5
A6-2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4.40	.700	1	5
A6-3	나는 한국인들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3.93	.970	1	5
	A6(평균)	4.30	.660	1	5

#### 7)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긍정 인식)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여섯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긍정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는 문항의 평균은 3.45이었고, 표준편차는 0.896이었다. 이어서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는 문항의 평균은 3.69로 모국 긍정 인식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표준편차는 0.80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다’ 는 문항의 평균은 3.39로 네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는 0.843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삶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는 문항의 평균은 3.61이었으며 그 표준편차는 0.745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평균이 3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모국 긍정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사회, 문화적 선진국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국 긍정 인식의 평균은 3.54이고, 표준편차는 0.666으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긍정 인식)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5-9 >와 같다.

〈표 5-9〉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긍정 인식)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7-1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3.45	.896	1	5
A7-2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3.69	.808	1	5
A7-3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다	3.39	.834	1	5
A7-4	한국은 삶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3.61	.745	1	5
	A7(평균)	3.54	.666	1.5	5

8)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부정 인식)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일곱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부정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4.41이고 표준편차는 0.583이었다. 이어서 ‘한국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는 문항의 평균은 4.3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635로 나타났다. 이 두 설문 문항을 살펴 보면 모국 긍정 인식에 비해서 그 값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과열된 경쟁 및 물가의 상승에 대해선 미국동포 대부분이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모국 부정 인식(평균)의 평균은 4.37이고, 표준편차는 0.512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부정 인식)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10〉과 같다.

〈표 5-10〉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부정 인식)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8-1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4.41	.583	1	5
A8-2	한국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4.33	.635	1	5
	A8(평균)	4.37	.521	2.5	5

### 9)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여덟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거주국 적응)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미국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82이었고 표준편차는 0.774이었다. 이어서 ‘미국동포는 한국의 국제정치·외교에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59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는 0.865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미국동포는 K팝 확산 등 한국의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87로 가장 높았다. 즉, 미국동포는 한국의 문화 확산에 제일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준편차는 0.828이었다. 모국 기여(평균)의 평균은 3.76이고, 표준편차는 0.719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9-1	미국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3.82	.774	1	5
A9-2	미국동포는 한국의 국제정치·외교에 기여한다	3.59	.865	1	5
A9-3	미국동포는 K팝 확산 등 한국의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	3.87	.828	1	5
	A9(평균)	3.76	.719	2	5

### 10) 정책적 요인(복수국적)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아홉 번째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복수국적)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72이었고, 표준편차는 1.110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이 글로벌화에 잘 대응하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혀 주기 바란다’는 문항의 평균은 4.04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는 0.998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65세 이상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는 문항의 평균은 3.78이었고 표준편차는 1.214였다. 복수국적(평균)의 평균은 3.85이고, 표준편차는 0.867로 분석됐다. 정책적 요인(복수국적) 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12>와 같다.

**<표 5-12> 정책적 요인(복수국적)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1-1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3.72	1.110	1	5
B1-2	한국이 글로벌화에 잘 대응하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혀 주기 바란다	4.04	.998	1	5
B1-3	65세 이상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3.78	1.214	1	5
	B1(평균)	3.85	.867	1	5

### 11)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열 번째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한국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 을 받는 제도를 잘 안다’ 는 문항의 평균은 2.50으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고, 표준편차는 1.030이었다.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이어서 ‘미국동포(영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안다’ 는 문항의 평균은 2.55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053이었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재외동포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만족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2.98로 세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컸다. 표준편차는 0.984이었다. 종합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평균)의 평균은 2.68이고, 표준편차는 0.811로 분석됐다.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2-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한국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 을 받는 제도를 잘 안다	2.50	1.030	1	5
B2-2	미국동포(영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안다	2.55	1.053	1	5
B2-3	재외동포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현재의 국민건강 보험 혜택에 만족한다	2.98	.984	1	5
	B2(평균)	2.68	.811	1	5

## 12)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열한 번째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은 미국동포를 적극 지원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2.67로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고, 표준편차는 0.843이었다. 이어서 ‘한국은 미국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2.95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91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한국은 미국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2.91로 세 설문 문항 중에서 가장 컸다. 표준편차는 0.833이었다. 동포정책의 평균은 2.84이고, 표준편차는 0.749로 분석됐다. 정책적 요인들의 평균을 고려해 보면 복수국적의 평균은 3.85로 대부분의 미국 동포가 필요성이나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동포정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수국적의 경우,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되는 정책으로 ‘동포’ 라는 점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모국이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많은 점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건강보험)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이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포정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및 동포 관련 교육·문화 투자나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가시적인 활동에 힘입어 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동포에 투여되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요인(동포 정책)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14>와 같다.

<표 5-14>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3-1	한국은 미국동포를 적극 지원한다	2.67	.843	1	5
B3-2	한국은 미국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95	.911	1	5
B3-3	한국은 미국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2.91	.833	1	5
B3-4	한국은 미국의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3	.820	1	5
	B3(평균)	2.84	.749	1	5

### 3. 측정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변수에 대해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통계지표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SPSS 22.0을 활용했다. 신뢰도 분석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 값을 0.6 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측정 문항을 정제했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요인추출을 시행했으며, 요인회전은 요인 간 독립성을 검증하는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12개의 변수 요인에 대해 신뢰도와 요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신뢰도 지표인 (Cronbach's  $\alpha$  값이 귀환 의향 요인 (A1)이 0.720, 경제적 요인(A2)이 0.902, 사회적 관계망 요인(A3)이 0.825, 사회·문화적 요인의 거주국 적응 요인(A4)이 0.921, 사회·문화적 요인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A5)이 0.605,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정체성 요인(A6)이 0.780,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긍정인식 요인(A7)이 0.824,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부정 인식 요인(A8)이 0.633,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 요인(A9)이 0.845, 정책적 요인의 복수국적 요인(B1)이 0.679, 사회보장제도 요인(B2)이 0.706, 동포정책 요인(B3)이 0.902로 모두 0.6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요인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수집한 표본의 적합도는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KMO 값은 0.6 이상,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p값)은 0.05보다 작으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 9개의 요인 간의 KMO 값이 0.770으로 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로서 적합함이 검증됐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0.000으로 기준치인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됐다. 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도 모두 0.6 이상의 높은 수치로 기준을 충족하여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했다.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15>와 같다.

<표 5-15> 미국동포 귀환 의향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하위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 $\alpha$ (값)
귀환 의향		A1-3	.796	.714	2.155	5.823	.720
		A1-2	.674	.686			
		A1-1	.644	.586			
경제적 요인		A2-2	.892	.877	2.677	7.235	.902
		A2-1	.866	.855			
		A2-3	.863	.839			
사회적 관계망 요인		A3-1	.885	.815	2.410	6.513	.825
		A3-2	.874	.821			
		A3-3	.656	.673			
사회·문화적 요인	모국 긍정인식	A7-2	.815	.717	2.746	7.422	.824
		A7-4	.808	.714			
		A7-1	.763	.670			

	거주국 적응	A7-3	.749	.679	2.681	7.245	.921
		A4-2	.858	.864			
		A4-1	.835	.836			
		A4-3	.778	.794			
	모국 기여	A9-1	.851	.780	2.367	6.397	.845
		A9-2	.846	.810			
		A9-3	.777	.732			
	모국 정체성	A6-2	.896	.849	2.248	6.075	.780
		A6-1	.831	.782			
		A6-3	.749	.688			
	거주국 부적응	A5-2	.796	.757	1.796	4.855	.605
		A5-3	.691	.650			
		A5-1	.641	.637			
	모국 부정인식	A8-2	.844	.764	1.536	4.151	.633
		A8-1	.786	.732			
정책적 요인	동포정책	B3-4	.917	.865	3.194	8.633	.902
		B3-2	.880	.796			
		B3-3	.877	.834			
		B3-1	.786	.681			
	사회보장 제도	B2-2	.885	.814	1.965	5.311	.706
		B2-1	.807	.745			
		B2-3	.600	.540			
	복수 국적	B1-3	.783	.637	1.866	5.043	.679
		B1-2	.757	.692			
		B1-1	.663	.718			

#### 4.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을 검증하기 전의 선행 작업으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로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 변수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의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측정척도가 등간, 비율척도일 때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5-16>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의 거주국 적응(이하 거주국 적응\_문화), 거주국 부적응\_문화, 모국 정체성\_문화, 모국 긍정\_문화, 모국 부정\_문화, 모국 기여\_문화, 정책적 요인의 복수국적

(이하 복수국적\_정책), 사회보장\_정책, 동포정책\_정책 변수와 종속변수인 귀환 의향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관계 계수 값을 보면, 문화 거주적응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가 0.52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사회보장 요인과 문화 거주적응 요인의 관계가 0.00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5-16〉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명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거주국 적응 _문화	거주국 부적응 _문화	모국 정체성 _문화	모국 긍정 _문화	모국 부정 _문화	모국 기여 _문화	복수 국적 _정책	사회 보장 _정책	동포 정책 _정책	귀환 의향
경제적 요인	1											
사회적 관계망	-.072	1										
거주국 적응 _문화	.523***	-.226***	1									
거주국 부적응 _문화	-.195***	.104	-.270***	1								
모국 정체성 _문화	.150**	.219***	.009	.013	1							
모국 긍정 _문화	.125*	.017	.184*	-.103	.114*	1						
모국 부정 _문화	.053	.058	.062	.173**	.194***	.077	1					
모국 기여 _문화	.250***	-.074	.335***	-.076	.100	.343***	.206***	1				
복수국적 _정책	.104	.202***	.020	.127*	.199***	.151**	.174**	.184***	1			
사회보장 _정책	.148**	-.005	.036	.004	.144**	.187***	.121*	.173**	.200***	1		
동포정책 _정책	-.006	-.009	.023	-.111*	-.043	.289**	-.030	.141*	.036	.208***	1	
귀환의향	-.048	.464***	-.206***	.189***	.259***	.093	.155**	.062	.376***	.102	.031	1

\*p<0.05, \*\*p<0.01, \*\*\*p<0.001

## 5. 다중회귀분석

### 1) 다중회귀분석의 모형적합도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통제변수(법적 지위, 연령대, 성별, 거주기간, 이주 나이, 이민 세대, 학력)이 귀환 의향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여 검증하는데 공차 값이 0.1 이하로 나타나거나 VIF 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출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17>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6.412$ ,  $p<0.001$ ). 그리고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1.8% 정도로 파악됐다( $R^2=0.418$ , 수정된  $R^2=0.353$ ). 한편 모든 변수의 공차 한계(허용 오차)가 0.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5-17>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한계
	B	표준오차	$\beta$			
(상수)	-0.268	0.642		-0.417	0.677	
경제적요인	0.008	0.062	0.008	0.133	0.895	0.598
사회적 관계망	0.236	0.045	0.308	5.201	0.000***	0.564
문화거주적응	-0.057	0.064	-0.057	-0.889	0.375	0.486
문화거주부적응	0.158	0.065	0.120	2.422	0.016**	0.806
문화모국정체성	0.090	0.074	0.064	1.221	0.223	0.715
문화모국긍정	0.103	0.072	0.074	1.424	0.155	0.730
문화모국부정	0.065	0.089	0.037	0.736	0.462	0.793
문화모국기여	0.066	0.069	0.052	0.961	0.337	0.687
정책복수국적	0.293	0.054	0.275	5.386	0.000***	0.759

정책사회보장	-0.001	0.058	-0.001	-0.019	0.985	0.764
정책동포정책	0.022	0.062	0.018	0.361	0.719	0.790
법적 지위 (시민권자)	0.025	0.126	0.012	0.201	0.841	0.590
연령(30대)	0.254	0.369	0.045	0.688	0.492	0.466
(40대)	0.127	0.190	0.051	0.670	0.504	0.340
(50대)	0.102	0.132	0.051	0.777	0.438	0.466
성별(남성)	0.043	0.094	0.023	0.458	0.647	0.789

R<sup>2</sup>=0.418, 수정된 R<sup>2</sup>=0.353, F=6.412, p=0.000

종속변수 : 귀환 의향

\*p<0.01, \*\*p<0.05, \*\*\*p<0.001

\*거주 기간, 이주 나이, 이민 세대, 학력 등을 통제함

## 2) 회귀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지지가 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독립변수는 사회적 관계망, 거주국 부적응,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독립변수들은 모두 가설에서 예상과 마찬가지로 정(+)의 방향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거주국 부적응,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모국 귀환 의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 가설 3-2, 가설 4-1이 채택됐다.

채택된 가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의 표준화 계수는 0.308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0.308만큼 증가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거주국 부적응 인식은 1단위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0.120만큼 증가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복수국적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0.275만큼 증가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택된 가설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거주국 적응과 거주국 부적응의 회귀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다. 미국 거주 적응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감소할 거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는데, 미국 거주 부적응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은 증가하는 가설은 채택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으로 귀환할 의향이 의미 있게 높아지지만, 미국에 잘 적응한다고 해서 귀환할 의향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 영향 중에서는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적 회복 또는 취득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수국적 제도가 향후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현지 동화 가능성이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6. 가설 검증 결과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18>과 같다.

<표 5-18>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의 내용	채택 여부
가설1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미국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3-1 미국동포의 거주국 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미국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미국동포의 모국 정체성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4 미국동포의 모국 긍정인식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5 미국동포의 모국 부정인식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1	미국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채택

4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미국동포의 사회보장제도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3	미국동포의 동포정책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제2절 국민 수용성 분석 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민의 미국동포의 귀환 수용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로 수집된 관측치 수는 총 748명이다. 그리고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19>와 같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표본 중에서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372명으로 전체 표본의 4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산, 대구, 충남 순이었다. 연령대는 50대 193명(25.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가 178명(23.8%) 순이었다. 20대가 90명(12%)으로 가장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연령대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이 398명(53.2%), 여성이 350명(46.8%)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해외거주 동포 가족 및 귀환 동포 가족의 여부는 해외동포 가족은 110명으로 14.7%, 귀환동포 가족은 34명으로 전체 표본의 4.5%를 차지했다. ‘그런 가족이 없다’가 604명으로 전체의 80.7%가 해외 동포가족 또는 귀환한 동포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206명으로 2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인 가구 195명(26.1%), 2인 가구 186명(24.9), 1인 가구 118명(15.8%)으로 5인 가구 이상이 43명(5.75%)로 고르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268명(35.8%)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102명(13.6%)을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자유/전문직 71(9.5%), 구직 중 49명(6.6%) 등 나머지 직업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력은 대졸이 481명으로 64.3%의 비율을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32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이 총 347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국민)

변수명	빈도수
거주 지역	서울: 137(18.3%), 부산: 46(6.1%), 대구: 37(4.9%), 인천: 44(5.9%), 광주: 25(3.3%), 대전: 21(2.8%), 울산: 21(2.8%), 경기: 191(25.5%), 강원: 24(3.2%), 충북: 18(2.4%), 충남: 33(4.4%), 전북: 28(3.7%), 전남: 26(3.5%), 경북: 34(4.5%), 경남: 44(5.9%), 제주: 14(1.9%), 세종: 5(0.7%)
연령대	20대: 90(12%), 30대: 116(15.5%), 40대: 171(22.9%), 50대: 193(25.8%), 60대: 178(23.8%)
성별	남성: 398(53.2%), 여성: 350(46.8%)
해외 동포·귀환 동포 가족	해외거주 동포 있다: 110(14.7%), 귀환동포 가족 있다: 34(4.5%), 그런 가족 없다: 604(80.7%)
가구원 수	1인 가구: 118(15.8%), 2인 가구: 186(24.9%), 3인 가구: 195(26.1%), 4인 가구: 206(27.5%), 5인 가구 이상: 43(5.75%)
직업	자영업: 48(6.4%), 사무/기술직: 268(35.8%), 경영/관리직: 39(5.2%), 자유/전문직: 71(9.5%), 판매/영업 서비스직: 44(5.9%), 기능/작업직: 38(5.1%), 생산/운수직: 19(2.5%), 농림축수산업: 8(1.1%), 대학(원)생: 33(4.4%), (전업)주부: 102(13.6%), 은퇴/무직/구직 중: 49(6.6%), 기타: 29(3.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0.7%), 고등학교 졸업: 132(17.6%),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52(7.0%), 대학 졸업: 481(64.3%), 대학원 졸업: 78(10.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0(2.7%), 101-200만원: 35(4.7%), 201-300만원: 97(13.0%), 301-400만원: 117(15.6%), 401-500만원: 114(15.2%), 501-600만원: 116(15.5%), 601-700만원: 61(8.2%), 701-800만원: 77(10.3%), 801-900만원: 43(5.7%), 901-1000만원: 19(2.5%), 1001만원: 49(6.6%)

## 2.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요인별 데이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5-20〉과 같다. 국민의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위 요인인 모국 기여 인식 요인이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맨 뒤에 서술하기로 한다.

〈표 5-20〉 요인별 데이터 명칭 내역

변수	하위 요인	데이터 명칭
국민 수용성		A1-1, A1-2, A2-3
경제적 요인		A2-1, A2-2, A2-3
사회적 관계망 요인		A3-1, A3-2, A3-3
사회·문화적 요인 1	한국인 정체성	A4-1, A4-2, A4-3, A4-4
정책적 요인	사회보장제도	B1-1, B1-2, B1-3, B1-4
	동포정책	B2-1, B2-2, B2-3
사회·문화적 요인 2 (매개변수)	모국 기여 인식	A5-1, A5-2, A5-3

1) 국민 수용성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동포가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3.75이었고, 표준편차는 0.776이었다. 다음으로 ‘미국동포의 귀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는 문항의 평균은 3.32이었고, 표준편차는 0.864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미국동포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처럼 귀환도 큰 제약 없이 가능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3.50이었고 표준편차는 0.909였다. 전반적으로 국민 수용성 점수는 보통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항이 다른 문항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귀환하면 받아들이는 것은 ‘동포’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번 문항의 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가의 현재 입장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 수용성(평균)은 평균 3.52, 표준편차는 0.711로 분석됐다. 국민 수용성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1〉과 같다.

〈표 5-21〉 국민 수용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1-1	미국동포가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3.75	.776	1	5

A1-2	미국동포의 귀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32	.864	1	5
A1-3	미국동포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처럼 귀환도 큰 제약 없이 가능하다	3.50	.909	1	5
	A1(평균)	3.52	.711	1	5

## 2) 경제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귀환하는 미국동포는 중국동포나 러시아·CIS지역 동포에 비해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췄다’는 문항의 평균은 3.50이었고, 표준편차는 0.693이었다. 다음으로 ‘귀환하는 미국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49, 표준편차는 0.689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귀환하는 미국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48이었고 표준편차는 0.704였다. 경제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평균 3.5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동포 스스로가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치(평균: 3.38)와 비교적 유사하다. 경제적 요인(평균)은 평균이 3.49, 표준편차는 0.625로 분석됐다.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2>과 같다.

<표 5-22>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2-1	귀환하는 미국동포는 중국동포나 러시아·CIS지역 동포에 비해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췄다	3.50	.693	1	5
A2-2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	3.49	.689	1	5
A2-3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다	3.48	.704	1	5
	A2(평균)	3.49	.625	1	5

## 3) 사회적 관계망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형제·자매 등 재외 동포 친인척이 많은 편이다’ 는 문항의 평균은 1.86이었고, 표준편차는 0.995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재외동포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이다’ 는 문항의 평균은 1.93이었고, 표준편차는 0.981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나는 해외 체류 또는 방문을 통해 재외 동포사회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편이다’ 는 문항의 평균은 2.16이었고 표준편차는 1.213이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상당히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동포 설문 결과에서 한국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동포가 꽤 많았던 결과(평균: 3.38)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이민, 이주자가 당초에 사회적 관계망이 많이 있던 곳에서 소수자 그룹이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회적 관계망(평균)은 평균 1.98, 표준편차는 0.933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3>과 같다.

**<표 5-23> 사회적 관계망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3-1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형제·자매 등 재외동포 친인척이 많은 편이다	1.86	.995	1	5
A3-2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재외동포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이다	1.93	.981	1	5
A3-3	나는 해외 체류 또는 방문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편이다	2.16	1.213	1	5
	A3(평균)	1.98	.933	1	5

#### 4) 사회·문화적 요인(한국인정체성)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4.18이었고, 표준편차는 0.731이었다.

다음으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4.14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는 0.72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4.06이었고 표준편차는 0.899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인 혈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3.34였고 표준편차는 1.033이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정한 한국인의 요건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국적 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인 혈통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앞의 세 요인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에서 다문화사회가 진척되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혈통에 대한 관념이 일정 부분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정체성(평균)은 평균 3.93, 표준편차는 0.608으로 분석됐다. 사회·문화적 요인(한국인정체성)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5-24>와 같다.

**<표 5-24> 사회·문화적 요인(한국인정체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4-1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4.18	.731	1	5
A4-2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14	.723	1	5
A4-3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4.06	.899	1	5
A4-4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인 혈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3.34	1.033	1	5
	A4(평균)	3.93	.608	1.75	5

#### 5)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네 번째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 을 받게 되는 제도에 대해 잘 안다’ 는 문항의 평균은 2.27이었고,

표준편차는 1.076이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2.34, 표준편차는 1.047로 나타났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 등 조건을 갖추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잘 안다’ 는 문항의 평균은 2.67, 표준편차는 1.092였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미국동포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는 문항의 평균은 2.68 이었고 표준편차는 1.079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복수국적 동포들에 대해 사회 보장제도를 제공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의 B1-1과 미국동포의 B2-1 문항은 같은 기초연금 질문인데 평균이 국민은 2.27, 미국동포는 2.50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동포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민보다 조금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평균이 보통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과 관련 제도는 전체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설문을 보면, 미국동포(B2-3)는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만족도(평균: 2.98)을 보이는 데 비해, 국민(B1-4)은 미국동포가 국내 체류 시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에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관련, 미국동포와 국민의 인식에서 일정 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평균이 2.49이고, 표준편차는 0.874로 분석됐다.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5>와 같다.

**<표 5-25> 정책적 요인(사회보장제도)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1-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 을 받게 되는 제도에 대해 잘 안다	2.27	1.076	1	5
B1-2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2.34	1.047	1	5
B1-3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 등 조건을 갖추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잘 안다	2.67	1.092	1	5

B1-4	미국 동포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68	1.079	1	5
	B1(평균)	2.49	.874	1	5

### 7)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동포정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은 미국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00이었고, 표준편차는 0.814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은 미국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10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는 0.817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한국은 미국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07이었고 표준편차는 0.848이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동포 정책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미국동포의 동포 정책 요인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양쪽 모두 평균 수준(미국 동포:2.84, 국민: 3.06)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을 받는 미국동포가 지원을 하는 국민보다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포 정책(평균)의 평균 3.06, 표준편차는 0.755로 분석됐다. 정책적 요인(동포 정책)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6>과 같다.

<표 5-26> 정책적 요인(동포정책)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2-1	한국은 미국 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3.00	.814	1	5
B2-2	한국은 미국 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3.10	.817	1	5
B2-3	한국은 미국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3.07	.848	1	5
	B2(평균)	3.06	.755	1	5

## 8) 사회·문화적 요인(모국기여)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미국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48이었고, 표준편차는 0.740이었다. 다음으로 ‘미국동포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47이었고, 표준편차는 0.814로 나타났다. 마지막 설문 문항인 ‘미국동포는 K-Pop 확산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52이었고 표준편차는 0.874였다. 모국 기여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은 국민(A5-1, A5-2, A5-3)과 미국 동포(A9-1, A9-2, A9-3)이 동일한 데, 그 결과를 비교하면 미국 동포와 국민 모두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확산, 경제발전, 정치 및 외교 순으로 기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동포가 모국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국민이 미국동포가 모국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야별로는 경제발전, 문화적 확산에 대한 기여 인식에서 양쪽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모국 기여 인식(평균)의 평균 3.49, 표준편차는 0.710으로 분석됐다. 매개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모국 기여)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27>과 같다.

<표 5-27> 사회·문화적 요인(모국기여)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5-1	미국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3.48	.740	1	5
A5-2	미국동포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	3.47	.814	1	5
A5-3	미국동포는 K-Pop 확산 등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3.52	.874	1	5
	A5(평균)	3.49	.710	1	5

### 3.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통계지표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SPSS 22.0을 활용했다. 신뢰도 분석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 이용할 때 신뢰도를 저하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0.6 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측정 문항을 정제했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요인추출을 시행했으며, 요인회전에는 요인 간 독립성을 검증하는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개발된 7개의 요인에 대해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신뢰도 지표인 Cronbach's  $\alpha$  값이 국민 수용성 요인(A1)이 0.783, 경제적 요인(A2)이 0.881, 사회적 관계망 요인(A3)이 0.844,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A4)이 0.672,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A5)이 0.848,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 요인(B1)이 0.830,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 요인(B2)이 0.901로 모두 0.6 이상의 높은 수치로 기준을 충족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요인분석의 경우 표본의 적합도는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KMO 값은 0.6 이상,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p값)은 0.05보다 작으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 7개의 요인 간의 KMO 값이 0.812로 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로서 적합함이 검증됐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0.000으로 기준치인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됐다.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28>과 같다.

〈표 5-28〉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하위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 a (값)
경제적 요인		A2-2	.907	.853	2.436	10.590	.881
		A2-3	.897	.850			
		A2-1	.817	.739			
사회적 관계망 요인		A3-2	.886	.845	2.377	10.333	.844
		A3-1	.851	.792			
		A3-3	.831	.701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	A4-3	.787	.635	2.155	9.369	.672
		A4-1	.742	.594			
		A4-2	.723	.587			
		A4-4	.597	.436			
	모국기여 인식	A5-2	.842	.791	2.343	10.189	.848
		A5-3	.834	.768			
A5-1		.806	.747				
정책적 요인	사회보장 제도	B1-2	.824	.730	2.731	11.873	.830
		B1-4	.758	.699			
		B1-1	.753	.689			
		B1-3	.734	.606			
	일반 동포정책	B2-2	.885	.862	2.504	10.888	.901
		B2-3	.864	.833			
B2-1		.856	.810				
국민 수용성		A1-1	.866	.797	2.139	9.301	.783
		A1-3	.798	.712			
		A1-2	.697	.611			

#### 4.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주로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 변수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의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측정척도가 등간, 비율척도일 때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5-29〉와 같다.

〈표 5-29〉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명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한국인 정체성 _문화	모국기여 _문화	사회 보장 _정책	동포 정책 _정책	국민 수용성
경제적 요인	1						
사회적 관계망	.078*	1					
한국인 정체성 _문화	.174***	-.044	1				
모국기여 _문화	.315***	.151***	.146***	1			
사회보장 _정책	.116**	.373***	-.070	.284***	1		
동포정책 _정책	.167***	.217***	.123***	.379***	.399***	1	
국민 수용성	.328***	.112**	.109**	.401***	.280***	.248***	1

\*p<0.05, \*\*p<0.01, \*\*\*p<0.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한국인 정체성\_문화, 모국기여\_문화, 사회보장\_정책, 동포정책\_정책 변수와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관관계 계수 값을 보면, 국민 수용성과 문화 모국기여 요인과의 관계가 0.4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사회보장 요인과 문화 한국인정체성 요인의 관계가 -0.070으로 가장 낮았다.

###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 관계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chi^2$  값이 990.389, RMSEA 값이 0.069로 기준인 0.08보다 낮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분적합도는 IFI 값이 0.907, CFI 값이 0.906으로 기준을 충족했고, NFI 값이 0.883, TLI 값이 0.892로 기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5-30>과 같다.

<표 5-30> 구조모형의 적합도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chi^2$	RMSEA	NFI	TLI	IFI	CFI
기본모형	990.389	0.069	0.883	0.892	0.907	0.906
기준치		<0.08	>0.9	>0.9	>0.9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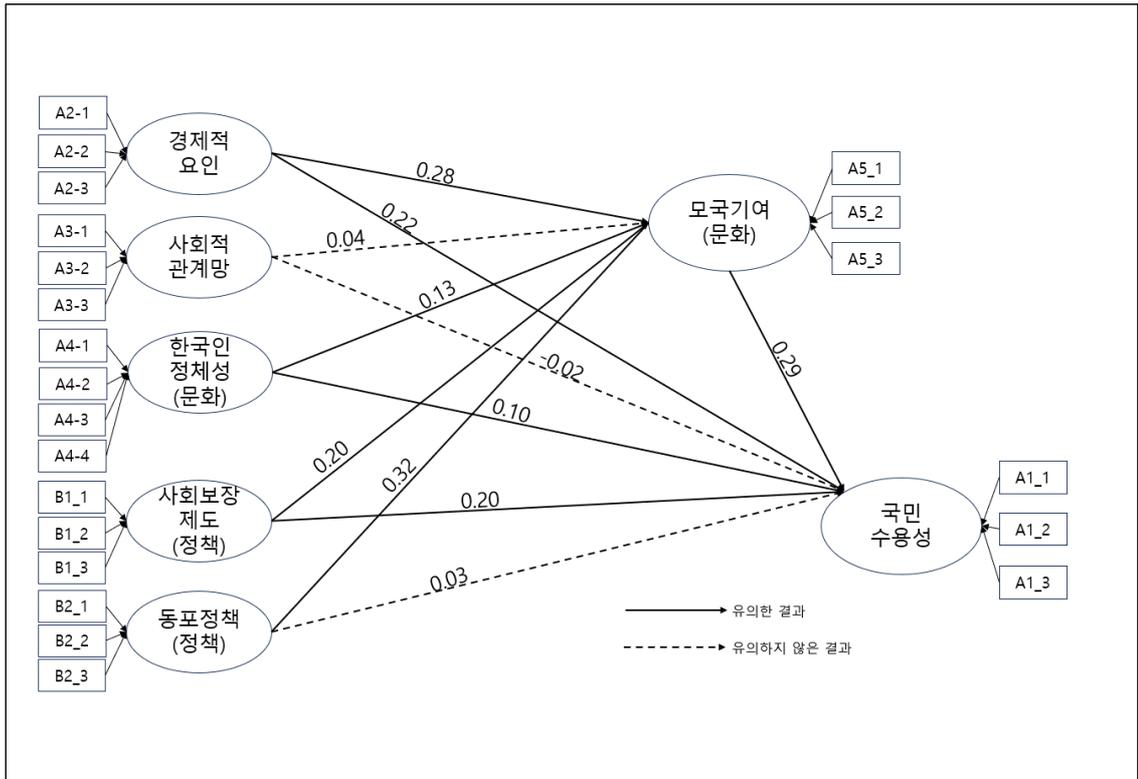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연구 모형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31>과 <그림 5-1>과 같다.

<표 5-31> 국민 수용성의 가설 분석 결과

구 분	$\beta$	B	표준 오차	CR(t값)	p
모국기여_문화 ←경제적요인	0.283	0.248	0.034	7.212	***
모국문화기여 ←사회적 관계망	0.042	0.029	0.026	1.109	0.267
모국기여_문화← 한국인정체성_문화	0.125	0.200	0.071	2.812	0.005**
모국기여_문화← 사회보장제도_정책	0.200	0.129	0.026	4.987	***
모국기여_문화 ←동포정책_정책	0.317	0.241	0.030	7.996	***
국민 수용성 ←경제적요인	0.216	0.216	0.042	5.081	***
국민 수용성 ←사회적 관계망	-0.020	-0.015	-0.030	-0.510	0.610
국민 수용성← 한국인정체성_문화	0.102	0.186	0.082	2.265	0.023*
국민 수용성← 사회보장제도_정책	0.204	0.150	0.031	4.779	***

국민 수용성 ←동포정책_정책	0.031	0.027	0.036	0.749	0.454
국민 수용성 ←모국기여_문화	0.290	0.331	0.057	5.780	***

\*p<0.05, \*\*p<0.01, \*\*\*p<0.001



<그림 5-1> 국민 수용성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요인이 모국기여\_문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이 0.283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정체성 요인\_문화는 p값이 0.005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은 0.125로 역시 모국기여\_문화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제도\_정책 요인은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이 0.200으로 모국 기여\_문화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동포 정책\_정책 요인도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이 0.317로 모국 기여\_문화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p값이 0.267로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 요인의 경우, p값이 0.61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p값이 0.000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이 0.216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은 p값이 0.023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은 0.102로 역시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제도\_정책 요인은 p값도 0.000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이 0.204로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동포 정책\_정책 요인은 p값이 0.454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이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p값이 0.000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요인 값은 0.29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과 한국인 정체성, 사회보장제도는 모국 기여\_문화 요인과 국민 수용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모국기여\_문화 요인이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포정책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모국기여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모국 기여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국기여 요인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기여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모국 기여의 매개 역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5-32>와 같다.

<표 5-32> 매개효과의 유형

경로	매개효과 유형
경제적 요인 → 모국기여 → 국민수용성	부분 매개
사회적 관계망 → 모국기여 → 국민수용성	매개효과 없음
한국인 정체성 → 모국기여 → 국민수용성	부분 매개
사회보장제도 → 모국기여 → 국민수용성	부분 매개
동포정책 → 모국기여 → 국민수용성	완전 매개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한국인

정체성\_문화, 사회보장제도\_정책, 동포정책\_정책과 국민 수용성의 관계에서 모국기여\_문화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했다. Sobel-test 결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test에 의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5-33>과 같다.

<표 5-33> 효과의 분해

구분		사회보장 _정책	한국인 정체성 _문화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요인	동포정책 _정책	모국기여 _문화
국민 수용성	직접효과	0.204	0.102	-0.020	0.216	0.031	0.290
	간접효과	0.058***	0.036*	0.012	0.082***	0.092***	-
	총효과	0.262	0.139	-0.007	0.298	0.123	0.290

\*p<0.05, \*\*p<0.01, \*\*\*p<0.001

검증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제도\_정책 요인이 모국기여\_문화를 매개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058$ )와 경제적 요인이 모국기여\_문화를 매개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082$ ), 그리고 동포정책\_정책이 모국기여\_문화를 매개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092$ )는 모두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이 모국기여\_문화를 매개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036$ )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모국기여\_문화를 매개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제도\_정책과 국민 수용성, 경제적 요인과 국민 수용성, 동포정책\_정책 요인과 국민 수용성,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과 국민 수용성의 관계에서 모국기여\_문화 요인이 각각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변인들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beta=0.298$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모국기여\_문화( $\beta=0.290$ ), 사회보장\_정책( $\beta=0.262$ ), 한국인 정체성\_문화( $\beta=0.139$ ), 동포정책\_정책( $\beta=0.123$ )순으로 나타났다.

## 6.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와 동포정책 요인을 독립변수로, 미국동포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5-34>와 같다.

<표 5-34>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1	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4-1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	사회적 관계망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7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8	8-1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2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9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제3절 소결 및 함의

본 장에서는 1절에서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했고, 2절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행했다. 3절에서는 각각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함의를 살펴본 뒤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 1. 미국동포 귀환 의향 실증 분석 결과

먼저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기술통계 분석은 종속변수인 미국동포의 귀환의향,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하위 요인 6개: 거주국 적응, 거주국 부적응, 모국 정체성, 모국 긍정인식, 모국 부정인식, 모국 기여), 정책적 요인(하위 요인 3개: 복수국적, 사회보장제도, 동포정책)을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본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이어서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실행했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기준치(0.6)를 크게 초과하여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고, 요인분석에 따른 요인 적재량도 모두 0.6 이상의 높은 수치로 기준을 충족하여 타당성을 확보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변수 간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인과관계 파악에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 없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 또한 41.8%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총 11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가설 2, 가설 3-2, 가설 4-1)이 채택되고 8개는 기각됐다. 독립변수 중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의 거주국 부적응, 정책적 요인의 복수국적이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채택된 가설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이는 Gmelch(1980)가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망의 파급력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거주국 적응과 거주국 부적응 요인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다. 거주국 적응 요인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가설 3-1)은 채택되지 못했는데, 거주국 부적응 요인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은 증가하는 가설은 채택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으로 귀환할 의향이 의미 있게 높아지지만, 미국에서 잘 적응한다고 해서 귀환 의향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의 ‘목표소득이론’의 성공 귀환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즉, 현지에 잘 적응하더라도 이주자 개인이 목표 달성 후 귀환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생각이었다면 귀환할 의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의 영향 중에서는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귀환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동포에게 국적 회복 또는 취득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복수국적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이 상승, 하락하거나, 현지 동화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8개 가설은 기각됐다. 먼저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이다. 이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동포가 경제력을 웬만큼 갖추었지만 이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유출해 볼 수 있는 결과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현지 정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귀환하는 실망이론과 거주국에서 목표소득을 성공적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귀환하는 목표소득이론이 상충하기 때문이다(Reyes, B. I., 1997). 즉, 경제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귀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방향으로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이 평균 3.38점으로 보통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동포는 경제력을 웬만큼은 갖췄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동포의 거주국 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1이다. 거주국에서 잘 적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지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성공과 유사하게 거주국에 잘 적응하더라도 출신국이

거주하기에 더 유리하면 언제든지 귀환할 의향이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동포의 모국 정체성은 귀환 의향에 정(+)<sup>2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3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동포가 모국 정체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동포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모국 정체성 평균이 4.3점으로 설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민 세대별로는 1세대가 70.5%, 1.5세대가 27.1%로 전체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들은 거의 한국인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인 정체성 요인은 변수로서 큰 의미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귀환 의향에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래에 많은 미국동포가 한국인 정체성을 일정 부분 상실한 시점에서 유사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 정체성 요인을 국민은 귀환 수용에 대한 일종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동포는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미국동포의 모국 긍정 요인은 귀환 의향에 정(+)<sup>2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4와 다섯째, ‘미국 동포의 모국 부정 요인은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5이다. 오늘날 미국동포의 대부분은 한국의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군사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이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면 모국 긍정 요인은 정(+)<sup>21)</sup>의 방향에서, 모국 부정 요인은 부(-)의 방향에서 가설이 채택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기각됐다. 그것은 긍정 요인을 부정 요인이 상쇄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를 보면 모국 긍정 인식의 경우 평균 3.54로 보통 수준을 꽤 웃도는 점수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준편차도 0.666으로 작아서 이 같은 의견에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국 부정 요인은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는 질문을 통해

21) 이 부분은 한인회 등 동포 관련 각종 단체, 한글학교 등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19세 이상으로 한정된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적인 미국 동포에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측정했다. 모국 부정 인식 통계는 평균 4.37이라는 훨씬 높은 점수로 한국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편차 역시 0.521로 모국긍정 인식보다도 낮아 모국 긍정보다 모국 부정에 대해 의견이 더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모국 긍정 인식보다 더 강한 모국 부정 인식이 귀환 의향의 상승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모국 부정 인식이 부(-)의 방향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도 모국 긍정 인식에 의한 상쇄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모국 부정 인식의 경우 거주국인 미국의 환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물가 역시 상승함으로써 거주 여건이 나빠진 점이 가설의 채택을 막는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인식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6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동포가 모국의 경제·외교·문화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유의할 만한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국으로 귀환하는 것과 모국에 기여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동포는 모국이니까 기여하는 것이지, 귀환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미국동포의 사회보장제도 인식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2이다. 사회보장제도 요인은 미국동포가 귀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 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된 요인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동포가 한국의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한국의 기초연금과 기본적인 의료보험 서비스가 미국보다 낮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한국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7,500원, 부부 가구이면 51만 7,080원이다(한겨레신문, 2023.1.8.). 저소득층이 받는 보조금으로서 한국의 기초연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생활 보조금(Supplement Security Income:SSI)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 2023년 단독가구 이면 2023년 월 최대 914달러, 부부이면 1,371달러다(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3)<sup>22</sup>). 이는 원화로 각각 약 120만 원, 180만 원 정도로 한국의 기초연금 혜택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덟째, ‘미국동포의 동포정책 인식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미국 연방정부의 지급액 외에 주 정부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하기도 한다.

라는 가설 4-3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적 요소나 비중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한글, 역사·문화교육, 모국-동포간 네트워크 확대, 동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이 평균 2.84점으로 보통 수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동포가 동포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국민 수용성 실증분석 결과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고,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기술통계 분석은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정책적 요인(하위 요인 2개: 사회보장제도, 동포정책)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위 요인 2개 중 1개(한국인 정체성), 그리고 매개변수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 요인 등 총 7개 요인을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본적 분석을 시행했다. 이어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행했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기준치(0.6)를 크게 초과하여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고, 요인분석에 따른 요인 적재량도 거의 모두 0.6 이상의 높은 수치로 기준을 충족하여 타당성을 확보했다. 변수 간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 관계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했다. 그 결과 절대적합도( $\chi^2$ :990.389, RMSEA:0.069), 증분적합도 (IFI : 0.907, CFI :0.906) 등의 지표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11개의 가설 중 8개가 채택되고 3개는 기각됐다. 매개효과는 매개변수인 모국기여\_문화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 사회보장제도\_정책 요인 등 3개 요인과 종속 변수인 국민 수용성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은 동포정책\_정책 요인과 국민 수용성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됐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기여 요인과 국민 수용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이 사이에서의 매개 역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된 가설에서 매개변수인 모국기여\_문화 요인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화요인( $\beta$ ) 값을 살펴보면, 동포정책\_정책 요인이 0.317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어서 경제적 요인이 0.283으로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이 0.125로 뒤를 이었다. 즉, 동포정책\_정책 요인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모국기여\_문화 인식이 0.317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표준화 요인( $\beta$ ) 값은 모국기여\_문화 요인이 0.29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경제적 요인이 0.216,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이 0.10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수용성에는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총효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0.298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사회보장\_정책 요인이 0.262였으며, 이어서 한국인 정체성\_문화 요인이 0.139, 동포정책\_정책 요인이 0.123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사회보장\_정책 요인이 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국민 수용성에 대해 ‘모국 기여 인식’이 갖고 있는 매개효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 사회보장제도 요인을 강화하면 미국동포의 모국기여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의 수용성이 직간접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포정책 요인을 강화하면 국민은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인식도가 높아짐으로써 수용성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모국 기여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은 미국동포 귀환에 대한 수용성을 인식하는 데 국민이 ‘동포가 얼마나 모국에 기여하는가’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각된 가설 3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국민의 재외동포 사회망으로 얼마나 많은 친인척, 친구가 해외에 살고 있거나 귀환하여 국내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측정했다. 즉, 해외에 가까운 재외동포 친인척, 친구들이 많으면 이들이 어떻게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모국에 기여하는지 더 잘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과 가까운 재외동포가 현지 또는 한국 내에 살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재외동포 가족, 친인척, 친구가 없는 응답자가 80.7%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변에 재외동포가 별로 없다 보니 충분한 접촉할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재외동포가 모국에 기여하는 활동을 인식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국민 수용성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6이다. 해외에 가까운 재외동포 친인척, 친구들이 많으면 미국 동포의 귀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모국 기여’ 요인과 비슷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의 경우 재외동포 가족, 친인척, 친구가 주변에 너무 없거나 적었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 수용성이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의 경우 재외동포 사회적 관계망은 자신이 이민하는 경우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동포의 수용인식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국민 수용성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8-2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 가설이 기각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한글, 역사·문화교육, 모국-동포간 네트워크 확대, 동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 국민은 3.06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이는 국민이 미국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실질적인 정책적 요소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미국동포와 국민의 인식 분석 결과 비교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 인식 결과를 비교한다. 본 논문은 미국동포와 국민 양쪽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4개 변수를 똑같이 설정했다. 그러나 하위 요인은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던진 공통 질문 요인과 비공통 질문 요인으로 구성됐다.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함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다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공통 질문 요인의 가설 12개이다. 여기서는 가설의 채택, 기각을 기준으로 미국동포와 국민의 인식 결과를 비교한다. 공통 요인의 질문 내용과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35>와 같다.

<표 5-35> 미국 동포-국민의 공통 질문과 가설 채택 결과

공통설문 요인	설문 대상	설문 주요 내용	종속변수	가설 번호	가설 채택 여부(○×)
경제적 요인	미국동포	미국동포의 경제력 수준	귀환의향	가설1	×
	국민		국민수용성	가설5	○
사회적 관계망	미국동포	미국동포의 한국내 관계망	귀환의향	가설2	○
	국민	국민의 재외동포 관계망	국민수용성	가설6	×
(모국) 한국인 정체성	미국동포	미국동포의 한국어, 문화, 사회 친숙도	귀환의향	가설 3-3	×
	국민	한국인 요건(한국어, 문화, 국적, 혈통)	국민수용성	가설7	○
모국기여	미국동포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귀환의향	가설 3-6	×
	국민		국민수용성	가설9	○
사회보장 제도	미국동포	한국 기초연금, 건강보험 인식도와 만족도	귀환의향	가설 4-2	×
	국민	미국동포 기초연금, 건강보험 수혜 수용도	국민수용성	가설 8-1	○
동포정책	미국동포	미국동포 한글, 역사문화 교육 및 단체활동 지원정책 인식도	귀환의향	가설 4-3	×
	국민		국민수용성	가설 8-2	×

공통질문요인 : ①미국동포 : 설문 A2, A3, A6, A9, B2, B3, ②국민 : 설문 A2, A3, A4, A5, B1, B2

비교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요인 등 5개 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가설의 채택과 기각이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는 점과 동포 정책 요인의 경우 모두 가설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적 요인의 경우, 국민이 미국동포가 경제력을 웬만큼 갖췄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귀환 수용성이 유의하게 나오면서 가설이 채택됐지만, 미국동포는 경제력 수준을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유출해 볼 수 있는 결과다.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에 대한 인식 역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얼마나 많은 가족, 친인척, 친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얼마나 많은 친인척, 친구가 해외에 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측정했다. 결과는 미국동포의 경우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국민의 경우엔 기각됐다. 즉, 미국동포에게는 귀환 시 현실적으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관계망이 귀환 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미국동포의 귀환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과 가까운 재외동포가 현지 또는 한국 내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경우 재외동포 사회적 관계망은 자신이 이민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동포의 수용 인식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적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인 정체성 요인은 국민의 경우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미국동포의 가설은 기각됐다. 국민은 한국인이 되려면 한글, 한국문화는 웬만큼 이해하고,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미국동포는 여기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는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한국인의 요건을 자연스럽게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동포의 가설이 기각된 것은 이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아직 상실하지 않았고, 이를 귀환을 위한 어떤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모국 기여 요인은 미국동포나 국민 모두에게 ‘미국동포가 모국의 경제·외교·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측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국 기여가 국민의 경우에는 가설이 채택되고, 미국동포의 경우는 기각됐다. 모국기여가 국민이 미국동포를 수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모국 기여는 미국동포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해줌으로써 신뢰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인정과 수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수용성 인식조사에서 ‘모국 기여’가 매개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미국동포는 여기에 유의할 만한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동포가 모국의 경제·외교·문화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 서라기보다는 귀환하는 것과 모국에 기여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요인은 미국동포가 귀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 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와 관련한 가설은 국민의 경우 채택, 미국동포의 경우 기각됐다. 이는 국민은 요건을 제시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동포는 귀환의 요건으로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미국동포의 건강보험 수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질문에 대한 국민의 응답은 평균 2.68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평균 2.34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혜에 대한 만족도는 26.98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이 재정 및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소극적 수용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미국동포는 이러한 혜택이 귀환 의향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보장제도 요인에서도 미국동포의 귀환에 국민은 일정한 수용 요건을 제시하는 반면, 미국동포는 요건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5개 요인의 질문 내용을 보면, 4개의 요인은 같은 대상에 관한 질문인 데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질문은 관계망이 형성되는 지리적 위치가 두 집단 간에 다른 차이가 있다. 즉, 미국동포의 경우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고, 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의 동포사회와 일부 국내에 형성된 재외동포 관계망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인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요인의 가설은 국민 쪽은 채택된 데 비해서 미국동포의 가설은 기각됐다. 이는 미국동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은 통과의례로서 미국동포의 귀환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포정책 요인은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서 가설이 기각됐다. 즉, 공통 질문 요인 중 유일하게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1990년대 말 김영삼 정부가 ‘국내외 동포의 상생 발전’을 천명한 ‘신교포정책’을 선언했음에도 이후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현지화 정책’이 지속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4. 미국 동포·국민 인식 분석 결과의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국민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본적 통계,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교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면 매개변수 ‘모국 기여’의 중요성,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 모국 귀환의 ‘요건’의 설정과 불인정,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 ‘잃지 않은 한국인 정체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모국 기여’ 요인이 국민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국민이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해 다른 요인들 외에 ‘모국 기여’라는 매개체 또는 또 하나의 자(尺)를 통해 수용성에 대해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동포의 귀환을 아직은 현실적인 쟁점으로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국 기여’가 국민의 수용성을 인식하는 요인으로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모국 기여’ 변수는 미국동포에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환과 모국 기여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동포가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폭넓게 제공해 주고, 그 결과가 충실하게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이다.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 요인은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 모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매개변수인 ‘모국 기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동포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현재의 동포정책이 재외동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라,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글로벌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을 표명했지만, 큰 틀에서 ‘이주했으면 거주국에서 잘 살라’는 소극적 ‘현지화 정책’에서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정부가 명분상으로는 상생 교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지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나, 둘째 미래지향적 상생 교류가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없었거나, 셋째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을 선언하고, 동포를 지원하는 전담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사실을 고려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원인이든 결과는 미국 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상생 발전의 동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국 귀환의 ‘요건’ 설정과 불인정이다. 미국동포와 국민의 공통 질문에서 서른 다른 결과가 나타난 요인은 경제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미국동포에게는 모국정체성), 모국 기여, 사회보장제도 요인이다. 국민은 미국동포의 귀환 시 통과 의례로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미국동포는 이에 개의치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요건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귀환’과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인 정체성과 모국 기여 요인은 미국동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요건’이 설정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경제적 요인과 사회보장제도 요인은 귀환 후의 한국의 재정,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민으로서는 신경을 쓰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

동포는 경제적 요인의 경우 대체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사회보장제도 요인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여건(기초연금, 건강보험)이 한국에 비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에서 ‘요인’에 개의치 않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4개 공통 질문에서의 서로 다른 결과는 통과 의례로서 ‘요건’을 설정하려는 국민과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동포의 인식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국민은 이 ‘요건’의 담을 높이지 않게 하고, 미국동포는 현재 충족하고 있는 경제적 요인 등 4개 요인이 계속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개 공통 질문 요인이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국민이 설정하는 ‘요건’이 아직은 까다롭지 않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동포나 러시아·CIS지역 동포들의 귀환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는 재외동포재단의 국민인식조사 등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다(재외동포재단, 2015). 다만,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이 바뀌면 수용성의 요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은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이다. ‘미국 동포의 모국 긍정 요인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4와 ‘미국 동포의 모국 부정 요인은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5의 기각은 귀환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기초 환경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시사한다.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물가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돌아오기 힘든 모국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국 긍정과 모국 부정은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서 단기간의 처방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는 단지 미국동포의 귀환에만 한정되지 않는 한국의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동포의 경제적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미국동포의 거주국 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1이 기각된 것도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 가설 1의 기각은 경제적 여건을 웬만큼

갖췄음에도 귀향 의향을 밝히지 않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설 3-1의 기각은 적응에 성공하여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데도 모국 귀환 의향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거둔 미국동포가 귀향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의 만만치 않은 여건 때문에 귀환 의향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귀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귀환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 결과가 마지막으로 시사하는 것은 ‘잃지 않은 한국인 정체성’이다. ‘미국동포의 모국 정체성은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3은 기각됐다. 미국동포는 모국 정체성(평균 4.3점)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 세대별로 1세대가 70.%, 1.5세대가 27.1%로 전체의 9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동포의 내적 심리가 국적과는 별도로 한국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 2세, 3세대 등이 동포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난 150여 년간 해외로 나가는 이주의 흐름이 1990년대 초부터 유출입 흐름으로 바뀌면서 귀환하는 재외동포가 늘어나는데도 이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4대 거주 지역 중 가장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에 대해 고찰했다. 아울러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연구했다.

먼저 귀환이민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주론 및 귀환이주론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주의 주요 이론인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역사구조주의론, 사회적 자본론, 누적원인론, 초국가주의, 라벤스타인의 법칙과 귀환이론, 국내 연구를 통해 이주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개의 영향 요인, 즉,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도출했다.

이어서 미국동포의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한 적절한 설문 구성을 위해 미국 등 4대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CIS 동포의 경우 해방 후 상당수가 귀환했으나 막 시작된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귀환 길이 막히면서 잔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며, 이들의 귀환은 냉전체제가 해소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일본동포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 대거 귀국했으나 이후에는 한국전쟁 등 복잡한 국내외 사정이 겹치면서 중국, 러시아·CIS 동포와 같은 후속적 귀환의 흐름이 없다는 점도 파악했다. 여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민한 미국동포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민주화에 따른 독재체제의 종결, 교육여건

상승,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애초 이주 원인이 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군사적 요인이 대거 해소됨에 따라 귀환 이민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동포의 귀환은 선진국 이민에 따른 이점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에 비해 귀환에 따른 제약이 가장 적고 국민의 거부감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설계는 연구모형, 변수, 가설의 설정에 이어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결정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연구모형과 변수 설정은 미국동포와 국민 수용성의 파악을 위한 공통 요인과 귀환 의향 파악을 위한 동포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공통 요인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독립변수로는 4개의 독립변수 아래 11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했고, 종속변수 국민 수용성에는 4개 독립변수 아래 7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으로 설정했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모형에서는 ‘모국 기여’ 변수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매개변수로 설정했다. 가설은 미국동포와 국민 각각 11개씩으로 총 22개를 설정했다. 자료는 미국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설문지(국문, 영문 3종)를 설계하여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미국동포:2023.9.5~9.10, 국민: 2023.8.28.~9.3)를 통해 미국동포 74명, 국민 65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검토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했다. 본조사(미국동포: 2023.10.13.~10.22. 국민: 2023. 10.11~10.16.)에서는 미국동포 329명, 국민 748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했다. 표본추출은 미국동포의 경우 비확률표본추출법, 국민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적용했고, 분석방법은 SPSS(IBM SPSS 22)와 AMOS(IBM SPSS Amos 26)을 사용했다.

실증 분석은 먼저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의 경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했다. 신뢰도 분석은 12개의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으로 신뢰도를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KMO 값이 0.770으로 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로서 적합함을 검증했다.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관련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총 11개 가설 중 3개가 채택되고 8개가 기각됐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2(미국 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미국 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미국 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뢰도는 7개의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0.6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chi^2$  값이 990.389, RMSEA 값이 0.069로 0.08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했고, 증분 적합도는 IFI 값이 0.907, CFI 값이 0.906로 기준을 충족했고, NFI 값이 0.883, TLI 값이 0.892로 기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고, 가설은 11개 중에서 8개 채택되고 3개가 기각됐음을 확인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인식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국민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그리고 동포정책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1(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모두 8개이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동포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은 통과례로서 미국

동포의 귀환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 동포정책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의 경우, ‘현지화 정책’을 벗어나 재외동포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보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더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허용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와 관련 미국동포의 공공의교활동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야 한다. 모국 정체성 관련해서는 미국 전역에서 차츰 쇠퇴해 가고 있는 한글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를 1만 명까지 과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 관련에서는 세계한상대회로 상징되는 글로벌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성공한 미국 동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귀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방문사업은 물론 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이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계망의 저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출된 성과를 통해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이를 적극 알려 미국 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더욱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이주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 이민자가 가장 많은 미국동포에게도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 동포와 국민은 모두 동포 정책의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미국동포는 여전히 높은 한국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귀환에 따른 어떤 ‘요건’의 설정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넷째 국민은 무언가 통과 의례로서 ‘요건’을 설정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를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효능감 있는 미래 지향적 동포 정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과 미국동포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적극적 관리자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미국 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미국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과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집단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모국 기여’의 중요성,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 모국 귀환의 ‘요건’의 설정과 불인정,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 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같은 실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제기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필요성, 통합적 이주 정책의 수립 필요성, 인구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미국 동포 대상 정책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동포의 모국 귀환 의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의 거주국 부적응, 정책적 요인의 복수국적 등 3개 요인이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했고 경제적 요인 등 기타 8개 가설은 기각됐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동포의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는 경제적 요인, 한국인 정체성\_문화, 사회보장제도\_정책, 동포정책\_정책 요인이 매개변수인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을 통해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미국동포 인식 결과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채택된 가설 못지않게 기각된 가설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미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적 요인의 동포 정책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sup>23)</sup>. 지금까지의 동포 정책은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동포의 상생 혹은 공동 발전을 표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수준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실제로 이를 집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미국동포는 정부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 교류 및 네트워크, 단체활동 지원 등에 대해 시늉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서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으로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재외동포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실질적인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민족 구성원에 대한 윤리적 의무는 차치하고라도 재외동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바탕에서 모국과 재외동포가 상생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책집행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간 네트워크 강화, 한국인 정체성 함양 등의 대표적인 동포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가 공표되며, 엄정한 정책 평가가 수반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정책집행이 ‘체감되는 동포정책’의 결과로 이어져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이 높아지고, 매개 요인인 모국 기여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동포 정책의 복수국적 요인 관련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적 문제는 오랫동안 국민과 재외동포의 이해가 엇갈려 온 민감한 현안이다. 허용 대상을 확대하면 폭넓은 인재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과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제도의 악용과 형평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정서와 충돌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론의 장을 통한 의사 결집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끈질기게

23) 현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실천력과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11.30.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제언이다. 우선 모국 기여 요인과 관련, 미국동포의 공공외교 활동을 발굴하여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 이다(외교부, 2017). 2007년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중군위안부결의안’의 승인과 2014년 일본해로 서술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함께 쓰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안’의 버지니아주 의회 승인은 미국동포에 의해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성공 사례다. 미국 동포의 공공외교 활동은 이 밖에도 많지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로 기억되어 미국동포의 귀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국 정체성 관련해서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6백여 개의 한글학교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sup>24)</sup>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의 교과서와 함께 거주국별 현지 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이민 2세, 3세로 이어지는 미국 동포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차세대 동포 교사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 청소년 동포들의 모국 연수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전역의 한인회 등 각종 직능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회에서는 차세대 동포 청소년들이 미래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말에 운영하는 한글학교는 미국 동포사회에서 한글과 한국문화·역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단체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중심의 교육으로 반짝 활기를 찾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줄면서 쇠퇴하고 있다. 이들 한글학교가 온·오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24) 재외동포재단의 ‘2022년 재외한글학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의 한글학교는 610개로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한다. 전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해 온 차세대 청소년들의 모국 연수사업은 신설된 재외동포청에서 연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국방문 대체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재 전세계에서 재외동포 참가자가 연 1천 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20)<sup>25)</sup>. 이는 이스라엘이 연간 5만여 명을 초청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치다. 연간 모국연수 참가자가 크게 늘어나면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과 모국 기여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미국동포 귀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모국 긍정과 모국 부정 요인의 기각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급등한 물가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이 된 것은 동포 정책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의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대응은 귀환 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정책을 강화하여 귀환장벽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주국 부적응 요인 역시 정책적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주를 선택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적응 요인이 증가하여 귀환 의향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포사회의 직능단체들이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주국 적응 요인 관련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동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귀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 글로벌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성공한 미국동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귀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글로벌한민족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sup>26)</sup>가 교류와 교역을 확장하는 실질적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동포의

25) 2019년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한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에 참가한 재외동포 대학생과 중고생은 각각 278명, 651명으로 총 929명이다. 이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류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 방문 기회가 크게 줄었다가 2023년에는 다시 회복되면서 1천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 한상(韓商)이란 국적에 상관 없이 한민족 혈통의 경제인을 지칭하는 말이며,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컨벤션이다.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 시행하다가 2023년부터 재외동포청이 사업을 맡고 있다. 2022년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국내 42,495명, 해외 17,761명 등 총 60,466명이 참가했다(재외동포재단, (2022).

경제적 역량은 자력으로 신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교류, 교역을 통해서 신장하는 측면도 많다. 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 분석 결과 ‘모국 기여’를 통한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가장 큰 총효과를 나타낸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미국동포 분석에서는 경제적 역량이 있으면서도 이를 귀환의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아 기각됐다. 따라서 미국동포의 글로벌경제네트워크를 확장해 주면 모국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국민 수용성의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미국동포에게 세계 또는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귀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돌아와 경남 남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와 같이 귀환을 희망하는 미국동포가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재외동포 모국 귀환 정착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날로 쇠퇴하는 지방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주국에 잘 적응했으면서도 귀환 의향을 접지 않고 있는 미국동포 그룹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 등 정부가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은 물론 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이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계망 확대의 폭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주로 한국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매우 친밀도가 높은 관계망이 있음으로써 귀환 의향이 높아지는 요인이다. 이러한 모국 방문과 같은 교류행사를 통해 귀환 의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친밀도가 높은 친구나 지인의 관계망을 확대하는 데 보완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2. 국민 대상 정책에 대한 제언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가설 중 8개가 채택되고 3개는 기각됐다. 매개효과는 매개변수인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한국인 정체성\_문화, 사회보장제도

\_정책 등 3개 요인과 종속변수인 국민 수용성을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모국 기여\_문화 요인은 동포정책\_정책과 국민 수용성 간에 완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동포 정책은 주요 대상이 동포이고, 국민은 정책의 결과를 함께 수용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은 부차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과 관련, ‘현지화 정책’의 기초를 넘어서 국민과 재외동포의 상생 비전을 담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역이 국가 성장의 주축인 통상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는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새 정책에는 이민과 함께 귀환이 선순환의 생태계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즉, 미국 동포사회가 자체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모국과의 이민, 귀환 이민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뤄짐으로써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로 대두되어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포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보완 정책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교 교과서에 확대 수록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이들의 이주 및 형성 배경, 현황, 모국에 대한 기여, 민족사적 의미, 전략적 가치 등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과 재외동포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일자리, 한정된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서로 거부감을 가지거나 반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재외동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정책 수립 기능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지난 25년 동안 사실상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재단은 사업의 집행 기관으로서 현장 지원에 매몰됐고, 정책 수립 기능을 맡아야 할 외교부 재외동포과는

규모가 너무 작고 전문성이 없어 정책을 수립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의 가장 시급한 과업은 정책 수립의 기능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동포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동포정책’을 벗어나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를 유도할 수 있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 요인 관련해서는, 미국동포가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수혜 폭과 합리성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과 미국동포 간의 인식에 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에도, 국민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국동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 한글학교 지원과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에 대한 지원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정부의 미국동포의 한국인 정체성 함양에 대한 노력을 알게 되고,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 활동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용적 태도를 높일 것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한 글로벌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용과 미국동포의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국민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동포가 귀환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경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미국동포는 더욱 부유해지고, 모국에도 기여하며, 국가는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정부로부터,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국동포의 모국 기여를 통한 신뢰의 향상을 통해 미국동포의 귀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 요인은 정책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계망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이민을 확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 관련해서는 모국 기여

요인이 미국동포와 국민 간의 신뢰 증진을 통한 국민 수용성의 제고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의 사업을 통해서 또는 미국동포의 자발적 사업을 통해서 이뤄진 모국에 대한 기여 역할을 충실하게 발굴, 홍보해야 한다. 모국 기여는 국민 수용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미국동포의 귀환을 제한하는 마이너스(-) ‘요건’이 아니다. 미국동포의 분석 결과가 이에 대해 기각으로 나타난 것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를 귀환의 필요 요건으로 유의미하게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미래에 미국동포의 한국인 정체성 요건 등이 감소했을 때 이 플러스 요인인 ‘모국 기여’가 귀환의 필요 요건으로 바뀌어 미국동포와 국민 간에 인식의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재외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미국동포의 인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동포정책과 귀환 동포를 포함한 이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에 귀환했거나 실질적인 귀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동포, 러시아·CIS 동포들의 귀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귀환 재외동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적 이민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은 여전히 단일 민족의식이 짙은 국민 정서와 이로 인한 국민통합, 인구와 노동시장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개방의 폭과 차별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동포의 설문조사 시 많은 응답자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한인회, 한글학교, 각종 동포단체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이들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아직은 한글, 한국문화·역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다. 외국에 떨어져 있는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미국동포 전체의 귀환 의향을 대변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김영철. (2016). 아르헨티나 재외동포 1.5세의 역이민과 정착 연구. 한국민족문화. 60:83-111.
- 김재기·정금철. (2015). 미국 버지니아의회의 동해병기법과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치활동: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4:245-268
- 마이클 새머스. (2013),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옥, 이종희 (역), 이주(Migration). 서울:푸른길.
- 미국 사회보장국(SSA). (2019). 2019년도 연례 통계보고서. <https://news.koreadaily.com/2023/07/19/society/generalsociety/20230719210035207.html>. 미주중앙일보, 이게 미국인가...실망 역이민 급증. (2020.8.22.)에서 재인용. 검색일자 2023.8.6.
- 미주중앙일보. (2020.8.22.). 이게 미국인가...실망 역이민 급증. <https://news.koreadaily.com/2020/08/21/society/generalsociety/8586633.html>. 검색일자 2023.8.6.
- 미주중앙일보. (2023.7.20.) 한인 4명 중 3명 ‘역이민 고려 안 한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07/19/society/generalsociety/20230719210035207.html>. 검색일자 2023.8.6.
- 민기. (2009). 지역주민의 농촌성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6(3): 23-52.
- 백지원. (2011). 국적별 재외동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25-44.
- 서울신문. (2012.5.3.). 이민 갔던 노인 교포 ‘의료비 역이민’ 러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3010010>. 검색일자 2023.8.6.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 한국인구학. 23(3):7.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귀환 이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308>, 검색일자 2023.6.2.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2013),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 서울:일조각.
- 오정은·김경미·송석원. (2015). 국내 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
- 오정은·김경미·송석원·문민·김혜명. (2016).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
- 외교부. (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 외교부. (2023). 해외이주신고.
-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2003).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 맙시다. 열린책들.
- 윤인진. (2005).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110, 153-155.
- 윤인진·권일남·김태균·배진숙·송영호.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31-68.
- 윤인진·손지혜·이종원. (2020).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디아스포라연구. 14(1):7-46.
- 이광규. (2000).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 (1982). 재일한국인의 사회운동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3).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1-193.
- 이재은·김영평·정윤수. (2007). 발전원 위협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 16(2):189-217.
-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 이정면·최혁. (2003). 로키산맥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인 미국 초기이민사 -미 중서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줌
- 임채완·김홍매. (2011).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59. 189-208.
- 장태한. (2002). 4·29LA폭동과 한인사회.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한미동포재단.

- 미주한인이민100주년남가주기념사업회. 257.
- 재외동포재단. (2007).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09).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1). 2011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3).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7).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9).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동포재단. (2019). 2020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방안.
- 재외동포재단. (2022). 세계한상대회20년사.
-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2023.
- 정용문. (2020). 한인 이민자 귀환이민 의향 결정요인: 호주 한인 사례. 한국사회정책. 27(3):107-130.
- 조양현. (2008).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대외관계-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6:59-78
- 표준국어대사전. (2023).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자 2023.6.12.
- 한겨레신문. (2007.7.31.). 미 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26088.html>. 검색일자 2023.7.24.
- 한겨레신문. (2023.1.8.). 기초연금 5.1% 인상...1인 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4841.html>. 검색일자 2023.11.27.
-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 독립국가연합지역의 신흥 고려인사회 네트워크. 역사문화연구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이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308>, 검색일자 2023.6.2.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16).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이주와 정착 그리고 발전의 시간들-아메리카.
- 허윤철·임영호·조운용. (2017). 지역과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아스포라연구. 11(2): 51-88

- Basch, L. Glick Schiller, N. & Szanton Blanc, C. (eds.). (2003).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New York: Routledge.
- Berg, E. J. (1961). Backward-Sloping Labor Supply Functions in Dual Economies: The Africa Cas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5:468-492.
- Borjas, George J.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457-485.
- Boyle, M., Halfacree, K. & Robinson, V. (1998). *Exploring Contemporary Migration*. Harlow: Addison Wesley Longman.
- Brettell, C. B. & Hollifield, J. F. (2008).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In Brettell, C. B. and Hollifield, J. F.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새머스. (2013)에서 재인용.
- Cassarino, J.-P. (2004). Theorising Return Migration: The Conceptual Approach to Return Migrants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6(2), 253-279.
- Castles, Stephen. & Godula, Kosack. (1973).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erase, Francesco P. (1974). Expectations and reality: a case study of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ern Ital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8(2): 245-262.
- Frank, A. G. (1969).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Galor, O., & Stark, O. (1990). Migrants' Savings, the Probability of Return Migration and Migrants' Perform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1, 463-467.
- Gmelch. G.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135-159.
- Goss, J. & Lindquist, B. (1995). Conceptualis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317-351

- Greenwood, M. J. (1969).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 Labor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189-194.
- Harris, J. R. &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126-142.
- Hill, J. K. (1987). Immigrant Decisions Concerning Duration of Stay and Migratory Frequenc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5:221-23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 Glossary on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3). <https://www.iom.int/about-migration> 검색일자 2023.9.24.
- Katz, E. & Stark, O. (1986). Labor migration and risk avers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1):134-149.
- Kearney, M. (1986). From the invisible hand to visible feet: anthropological studie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331-361.
- Lauby, Jennifer. & Stark, Oded. (1988). Individual migration as a family strategy: young women in the Philippines. *Population Studies*. 42(3):473-486.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139-191.
- Lindstrom, David P. (1996). Economic Opportunity in Mexico and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3(3):357-374.
- Loury, Glenn. (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s*. in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P. Wallace & A. LaMond, ed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MacDonald, John. S. & MacDonald, Leatrice. D. (1964). Chain Migration Ethnic Neighborhood Formation and Social Networks. *The Milbank Memorial Fund*

- Quarterly*. 42(1). 82-97.
- Massey. Douglas S. (1990a).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im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0: 60-72.
- Massey. Douglas S. (1990b). Social structure, household strategies and the cumulative causation of migration. *Population Index* 56(1): 3-26.
- Massey, D. S., Joaqui Arango, Graeme Hugo, Ali Kouaoci, Adela Pellegrino, &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4):431-466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699-751.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Oxford: Clarendon Press.
- Massey. D. S. & Felipe Garcia Esapna. (1987).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cience*. 237:733-738.
- Merriam-webster. (2023). acceptanc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cceptance>, 검색일자 2023.5.25.
- Min, Pyong Gap. (2011). The Immigration of Koreans to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45 Year (1965-2009) Trend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95-223.
- Mines, R. & D. S. Massey. (1985).Patterns of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Two Mexican Communiti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0:104-123.
- Myrdal, Gunnar. (1957). *Rich Lands and Poor-The Road to World Prosperity*. New York:Harper and Row.
- Piore, Michael J.(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in Industrial Societie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othero, R. Mansell. (1990). Labor recruiting organizations in the developing world: introduc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221-228.
- Ranis, G., & J. C. H. Fei. (1961).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1:533-565.
- Ratha, D., Mohapatra, S. & Scheja, E. (2011). Impact of Migration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A Review of Evidence and Emerging Issues. The World Bank Development Prospects Group.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48(2):167-245. 새머스, 2013에서 재인용.
- Ravenstein, E. G. (1889).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52:241-301. 새머스, 2013에서 재인용.
- Reyes, Belinda I. (1997). *Dynamics of Immigration: Return Migration to Western Mexico*. San Francisco: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ur Flow*.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Sjaastad, Larry 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80-93.
- Stark, Oded. (1984). Migration decision making: a review artic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4:251-259.
- Stark, Oded. & David Levhari. (1982). On migration and risk in LDS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1(1):191-196.
- Taylor, J. Edward. (1986). Differential Migration, Networks, Information and Risk. In Oded Stark(ed.). *Migration Theory,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JAI Press. Greenwich, Conn. 141-171.
- Tilly, C. (2007). Trust Networks in Transnational Migration. *Sociological Forum*. 22(1):3-24.
- Todaro Michael.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38-148.

- Todaro Michael. P. & L. Maruszko. (1987). Illegal migration and US immigration reform: a conceptual framework.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101-104.
- Todaro Michael. P. (1989).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Longman
-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3). A Guide to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or Groups and Organizations. chrome-extension://efaidnbnmnibpcjpcglclefindmkaj/<https://www.ssa.gov/pubs/EN-05-11015.pdf>. 검색일자 2023.11.27.
- Vertovec, S. (1999).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447-462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84). *The :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80-85.
- Zelinsky, W. (1971). The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Geographical Review*. 61(2):219-249.

## 【ABSTRACT】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Motherland and National Acceptance

Jo Hyung Ja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changing dynamics of outward migration for the past 150 years, which has transitioned into both an inward and outward flow since the early 1990s. This shift presents a challenge in the absence of a systematic policy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the American diaspora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home country among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the research delves into the understudied domain of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the study focuses on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policy in response to this return migration tren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study initiated with a comprehensive theoretical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on migration theory and return migration theory. The preceding research on key theories of migration such as neoclassical economics, new migration economics, labor market segmentation, historical structuralism,

social capital, cumulative causation, transnationalism, Ravenstein's law, return theory, and domestic studies was used to identify four primary factors emerged as significant influencers of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s, sociocultur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Subsequently, a brief historical overview of migration and return was conducted for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with an emphasis on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questionnaire focused on elucidat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affirmed that within the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a greater number of individuals chose to remain in the host countries compared to those who returned as the return routes were impeded by the Cold War that ensued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The substantial return of individuals from these regions began in the 1990s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ld War. In the observation made regard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re was a substantial retur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contrast to the Korean residents in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however, there were no subsequent waves of return. This distinction can be attributed to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Korean War. It has been observed that Korean Americans who officially emigrated with passports have shown a heightened interest in return migration. This trend can be at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variou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that initially prompted their emigration. Factors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s to democratization, improved educational conditions, and reduced military tensions have contributed to this shift.

The research model and variables encompass both common factors designed to measure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as well as non-common factors aimed at captu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a result,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motherland,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11 sub-variables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national acceptance while seven sub-variables were categorized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to examine their influence relationships. Within the national acceptance model, a parameter was set to assess the role of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addition, a total of 22 hypotheses were formulated, 11 each for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329 Korean Americans and 748 Korean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This analysis encompassed the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demonstr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As a result, out of a total of 11 hypotheses, three were accepted and eight were rejected. The adopted hypotheses include Hypothesis 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the Korean American social network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Hypothesis 3-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maladaptive factors among Korean American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and Hypothesis 4-1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Korean American’s dual-citizenship awarenes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acceptance involves an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By employ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assess the mediating role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model fit of the structural equation was prov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verified that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plays a mediating role, with eight hypotheses accepted out of 11. The motherland contribution perception factor was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 factors, and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hile serving as a tot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actors and national acceptance. However, it did not exhibit th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national acceptance. The adopted eight hypothese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3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2 (Diaspora policy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5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7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8-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and Hypothesis 9 (Motherland contribution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Upon analyzing the queries directed at both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it was observed that while Koreans have established, o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acknowledge this “requirements.” Additionally, neither group perceives the diaspora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concerning policy factor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 forward-looking master plan for overseas Korean policy that extends beyond a “loc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strategic value of overseas Koreans. Support is advised for the expansion and inclusion of topics related to Korean diaspora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s for the dual citizenship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lowering the age of eligibility to 60 after securing public consensus. In the point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s in sociocultural factors, active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public diplomacy initiatives led by Korean Americans are needed, Regarding the national(Korean) identity, Korean language schools, which are declining across the United States, must be actively revitalized by establishing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s. Furthermore, an ac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articipants of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to 10,000. In the realm of economic factors, the global Korean economic network should be further activated, exemplified by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verseas Korean return resettlement program is recommended to offer incentives for successful returnees. For the social network factor,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foundational infrastructure of the network by promoting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World Korean Future Leaders Conference, and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along with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priva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hroug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complishments made through these policies and actively communicate these achievements to the public to maintain high national acceptance of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endeavo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who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dditionally, its significance lies in the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s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conducted through a nationwide survey and compared with the perceptions of Korean Americans, there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suggest that Korean Americans perceive Korea as a “motherland that is difficult to return to,” and while Koreans attempt to establish “requirement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seem to acknowledge this. These findings indicate a significant demand within the Korean Americ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overseas Korean policy that recognizes overseas Koreans as partners in development.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lay a managerial rol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of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foster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Keywords: Korean Americans, Koreans, Return Migration, Inclination to Return Migration, National Acceptance

**【부록 1】 미국동포 설문지(국문)**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미국동포의 모국(대한민국) 귀환 이민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조형재)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 수료생(전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미국 동포의 모국(대한민국) 귀환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 동포들의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순수한 연구 및 향후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논문에만 활용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응답에 6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조형재 ☎ +82-10-8894-7346 / hjjojo@naver.com

▶ 주 소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로스앤젤레스시 일원
- ② 뉴욕시 일원
- ③ 시카고시 일원
- ④ 샌프란시스코시 일원
- ⑤ 애틀랜타시 일원
- ⑥ 워싱턴 D.C. 일원
- ⑦ 시애틀시 일원
- ⑧ 휴스턴시 일원
- ⑨ 그 외 지역

SQ2. 미국에서 귀하의 신분(법적 지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미국 시민권자
- ②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 ③ 둘 다 아님 → 조사 중단

SQ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세 이상

S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 A. 미국동포의 모국(한국) 귀환에 대한 인식

A1.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의 친구(아는 사람)가 그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국 사회에서 나의 생활 수준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구의 연간소득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에서 만족할만한 자산을 축적했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이 한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자매 등 나의 친인척이 한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3) 잘 아는 친구(직계 가족, 친인척 제외)들이 한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이 미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자매 등 나의 친인척이 미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3) 잘 아는 친구(친인척 제외)들이 미국에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A5. 미국 생활 관련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미국의 노후 사회보장제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A6. 미국 생활 관련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사회 진출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시간이 흘러도 동포사회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인의 사회생활 패턴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A8.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에서의 삶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A9.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인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부인(미국동포 포함)을 차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 미국 동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국 동포는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미국 동포는 한국의 국제정치·외교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미국 동포는 K팝 확산 등 한국의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B. 귀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B1. 한국의 복수국적제도(2개 이상의 국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복수국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이 글로벌화 추세에 잘 대응하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혀 주기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4) 65세 이상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한국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을 받는 제도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살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미국동포(영주,시민권자)가 어떻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재외동포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3. 한국의 일반적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은 미국동포를 적극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미국 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은 미국 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은 미국의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B4.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 응답)

▶

###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는 미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20년 미만  
④ 20년-30년 미만              ⑤ 30년-40년 미만                      ⑥ 40년 이상

DQ2. 귀하가 미국으로 이주한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 ① 현지 태생                      ② 18세 이하                              ③ 19세-29세  
④ 30세-39세                      ⑤ 40세-49세                              ⑥ 50세-59세  
⑦ 60세 이상

DQ3. 귀하는 이민 몇 세대에 해당하십니까?

- ① 이민 1세대                      ② 이민 1.5세대(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민한 경우)
- ③ 이민 2세대                      ④ 이민 3세대 이상

DQ4.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분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 ① 1인 가구                      ② 2인 가구                      ③ 3인 가구
- ④ 4인 가구                      ⑤ 5인 가구 이상

DQ5.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 ④ 자유/전문직                      ⑤ 판매/영업 서비스직                      ⑥ 기능/작업직
- ⑦ 생산/운수직                      ⑧ 농림축수산업                      ⑨ 대학(원)생
- ⑩ (전업)주부                      ⑪ 은퇴/무직/구직 중                      ⑫ 기타(\_\_\_\_\_)

D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④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부록 2】 미국동포 설문지(영문)**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KOREAN AMERICANS' PERCEPTION ON RETURN  
TO THE MOTHERLAND(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survey.

My name is Jo Hyung jae, and I am a PhD student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 former special advisor of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his survey has been developed as part of the PhD thesis regarding the Korean Americans' perception on return to the motherland(Republic of Korea).

This survey is to be conducted for the research purpose only and to help influence the future policy development. The survey result will only be used for the thesis development. The survey responses and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s part of this survey will remain strictly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Protection of Secrets) and Article 34(Duty of Statistics Staff, etc.) of the Statistics Act. The survey will take approximately 6 minutes to complete. I appreciate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overseas Koreans.

- ▶ Contact : Jo Hyung jae, PhD Student in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82-10-8894-7346 / hjjojo@naver.com)
- ▶ Addres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ol of Social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SQ. Screening Questions**

SQL. Where do you live?

- ① Los Angeles area
- ② New York City area
- ③ Chicago area
- ④ San Francisco area
- ⑤ Atlanta area
- ⑥ Washington D.C. area
- ⑦ Seattle area
- ⑧ Houston area
- ⑨ Other area

SQ2. What is your legal status in the U.S.?

- ① U.S. citizen
- ②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ce holder in the U.S.)
- ③ Not both → Stop

SQ3. How old are you?

- ① 19-29 ② 30-39 ③ 40-49 ④ 50-59 ⑤ 60 or older

SQ4. What is your gender?

- ① Male ② Female

**A. Korean Americans' Perception on Return to the Motherland(Republic of Korea)**

A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am inclined to go back to Republic of Korea someday	①	②	③	④	⑤
2) There is a time when I miss my family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3) There is a time when I miss my friend (acquaintanc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A2.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The quality of my life in the American society is on the higher side.	①	②	③	④	⑤
2) The annual income of my household is on the higher side.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accumulated a satisfying amount of wealth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A3. Please respond to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Many of my direct family members (parents, grandparents, children, parents-in-law) liv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2) Many of my relatives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liv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3) Many of my friends whom I know well (those who are not direct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A4. Please respond to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Many of my direct family members (parents, grandparents, children, parents-in-law) live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2) Many of my relatives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live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3) Many of my friends whom I know well (those who are not direct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e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A5.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life in the U.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speak English fluently	①	②	③	④	⑤
2) I am familiar with the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①	②	③	④	⑤
3) I am used to the life and social patterns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4) I am satisfied with the American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①	②	③	④	⑤

A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life in the U.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have experienced racism in the U.S	①	②	③	④	⑤
2) It is difficult to break into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no matter how hard I try	①	②	③	④	⑤
3) It will not be easy for the Korean American society to assimilate into the American society even with time	①	②	③	④	⑤

A7.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Republic of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speak Korean fluently.	①	②	③	④	⑤
2) I am familiar with the Korean history and culture.	①	②	③	④	⑤
3) I am used to the life and social patterns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A8.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Republic of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developed natio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①	②	③	④	⑤
2)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developed nation socially and culturally.	①	②	③	④	⑤
3)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strong country in terms of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	①	②	③	④	⑤
4) The quality of life in Republic of Korea is relatively high.	①	②	③	④	⑤

A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Republic of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Competition is too fierc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2) The cost of living in Republic of Korea has risen a lot in comparison to the past.	①	②	③	④	⑤
3) Koreans discriminate outsiders who have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cluding Korean 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A10.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Republic of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Korean Americans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epublic of Korea in various ways, such as purchasing and promoting Korean products.	①	②	③	④	⑤
2) Korean American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①	②	③	④	⑤
3) Korean Americans contribute to the global distribution of Korean culture such as K-pop.	①	②	③	④	⑤

## B. Perception on the Current Policies Related to Return Migration

B1. What do you think about Republic of Korea's dual citizenship policy (recognizing two or more citizenship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Republic of Korea's dual citizenship policy for overseas citizenship holders who are 65 years old or older.	①	②	③	④	⑤
2) I am interested in applying for a dual citizenship status when I am 65 years old or older.	①	②	③	④	⑤
3) I wish Republic of Korea to respond to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make the dual citizenship policy available to more people by lowering the age requirement.	①	②	③	④	⑤
4) The dual citizenship application procedure for those who are 65 years old or older needs to be simplified.	①	②	③	④	⑤

B2.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ocial security system in Republic of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I know very well that overseas Korean residents who are 65 years old or older and hold dual citizenship can receive "basic pension" when they live in Republic of Korea and meet the set requirements	①	②	③	④	⑤
2) It is fair that Koreans who hold dual citizenship and are 65 years old or older receive basic pension when they live in Republic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3) I know well how overseas Korean residents (overseas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dence holders) can receive th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①	②	③	④	⑤
4) As a Korean living overseas,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①	②	③	④	⑤

B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statements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s general overseas Korean policies?

	Strongly disagree	Disagree	Moderate	Agree	Strongly agree
1) Republic of Korea actively supports Koreans living overseas	①	②	③	④	⑤
2) Republic of Korea allocates a lot of budget to teach Korean Americans about Hangeul, Korean history and culture	①	②	③	④	⑤
3) Republic of Korea tries very hard to increase exchange and network with Korean 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4) Republic of Korea provides support to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for their active activities and engagement	①	②	③	④	⑤

B4. Please use this section to freely express your opinions related to this survey.  
(option)

**DQ. Demographic Questions**

DQ1.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U.S.?

- ① Less than 5 years                      ② 5-9 years                      ③ 10-19 years  
 ④ 20-29 years                      ⑤ 30-39 years                      ⑥ 40 years or more

DQ2. How old were you when you migrated to the U.S.?

- ① Born in the U.S.                      ② 18 or younger ③ 19-29  
 ④ 30-39                      ⑤ 40-49                      ⑥ 50-59  
 ⑦ 60 or older

DQ3. What describes you the best?

- ① First-generation immigrant  
 ② 1.5-generation immigrant (born in Republic of Korea and migrated to the U.S.)  
 ③ Second-generation immigrant  
 ④ Third-generation immigrant or further down

DQ4.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 ① 1-person household
- ② 2-person household
- ③ 3-person household
- ④ 4-person household
- ⑤ 5 people or more

DQ5. What do you do for living?

- ① Self-employed (a business with less than 9 employees, family workers, private taxi drivers, etc.)
- ② Office/technical positions (general office worker, technician, primary/secondary school teacher, sailor, etc.)
- ③ Managerial/administrative positions (senior civil servants above the director level, corporate manager or higher roles, school principal, etc.)
- ④ Professional/freelance positions (university professor, doctor, lawyer, artist, etc.)
- ⑤ Sales/service (store clerk, salesperson, etc.)
- ⑥ General worker (on-site worker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cleaner, janitor, etc.)
- ⑦ Skilled worker (driver, cabinet maker, woodworker, etc.)
- ⑧ Agriculture, fishery, forestry (including family worker)
- ⑨ Student
- ⑩ Homemaker
- ⑪ Unemployed
- ⑫ Other

DQ6.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 attended?

- ① Graduated middle school or below
- ② Graduated high school
- ③ Currently attending or disenrolled from university (including community college)
- ④ Completed an undergraduate degree
- ⑤ Completed a postgraduate degree or higher

**【부록 3】** 국민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미국동포 모국 귀환과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조형재)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 수료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재외 동포의 모국 귀환 이슈 중에서 미국 동포의 귀환 이민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순수한 연구 및 향후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논문에만 활용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응답에 5분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지도 선택]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세종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세 이상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 A. 미국동포의 모국(대한민국) 귀환에 대한 인식

### ※ 본 설문조사에서의 미국동포는?

- ▶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A1.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국동포가 모국으로 귀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미국동포의 귀환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미국 동포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처럼 귀환도 큰 제약 없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A2.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중국동포나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비해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췄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환하는 미국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환하는 미국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미국동포가 취업을 위해 귀환하는 것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A3.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형제·자매 등 재외동포 친인척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해외에 살거나 국내로 귀환한 재외동포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해외 체류 또는 방문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A4.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한국어 구사	①	②	③	④	⑤
2) 한국문화와 역사 이해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국적 보유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인 혈통 보유	①	②	③	④	⑤

A5. 미국 동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품 구매·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K-Pop 확산 등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B. 미국 동포 귀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B1. 한국의 복수국적제도(2개 이상의 국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가진 미국 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이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혀주는 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B2. 재외동포와 관련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65세 이상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조건을 갖추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에 대해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 등 조건을 갖추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미국동포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B3. 한국의 일반적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은 미국 동포의 한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미국 동포와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은 미국 동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B4.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 응답)

▶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 등) 중에 현재 해외에 살고 있거나, 국내로 귀환한 가족이 있습니까?

- ①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    ② 해외에 살다 귀환한 가족이 있다  
③ 그런 가족이 없다

DQ2.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분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 ① 1인 가구                            ② 2인 가구                            ③ 3인 가구  
④ 4인 가구                            ⑤ 5인 가구 이상

DQ3.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④ 자유/전문직                            ⑤ 판매/영업 서비스직                            ⑥ 기능/작업직  
⑦ 생산/운수직                            ⑧ 농림축수산업                            ⑨ 대학(원)생  
⑩ (전업)주부                            ⑪ 은퇴/무직/구직 중                            ⑫ 기타(\_\_\_\_\_)

D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④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DQ5. 실례지만, 귀하 가족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 |                 |              |             |
|-----------------|--------------|-------------|
| ④ 301~400만원     | ⑤ 401~500만원  | ⑥ 501~600만원 |
| ⑦ 601~700만원     | ⑧ 701~800만원  | ⑨ 801~900만원 |
| ⑩ 901만원~1,000만원 | ⑪ 1,001만원 이상 |             |